

한글서체

생협평론 2014 여름 (15호)

길잡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불리는 것들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한국사회 친환경농산물의 현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8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4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신신일(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아이쿱농산)	38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권 단(옥천순환경제공동체 운영위원장)	54
좌담회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이야기	김근호, 임영택, 주경산, 홍진희, 이향숙	64

이슈

규제 완화라는 재앙, 그리고 의료민영화	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79
저성장시대의 주택정책 방향과 공유주택의 역할	변창흠(세종대학교 교수)	88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98
----------	-----------	----

돌발논문		
논습지의 중요성과 보전대책	주용기(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99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⑤		
삶의 질 높여줄 '우리의 집'을 구상하다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16

서평		
『가치를 다시 묻다』	신미정(구로생협 조합원)	126

협동조합소식		
GMO 오염의 대가를 치르게 될 유기농 생산자들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30

생협평론 2014 여름 (15호)

펴낸이	이정주
펴낸곳	(재) iCOOP협동조합연구소
편집위원	김기태 김아영 이대중 이선옥 이성선 정설경
편집위원장	염찬희
편집간사	장인혜
편집디자인	황인혜 (스튜디오 보싸)
펴낸날	2014년 6월 20일
주 소	서울시 구로구 향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4호
전 화	02) 2060-1373 / 4
구 독	1권 3,000원
e-book	교보문고, 리디북스, 알라딘, yes24에서 무료 구독 가능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불리는 것들

염찬희(편집위원장)

의외였다. 한국사회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부를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이가 생각만큼 많지 않았다.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문제 하나 풀고 가자. 친환경농산물은 사람들이 흔히 ‘오가닉(organic)’ 혹은 ‘유기농’ 이라고 부르는 농산물을 의미하는가? 실제로 주변에 물어보면 친환경농산물을 유기농이라고 등식화하여 답변하는 이들이 많다.

위의 문제에 간단하게 답을 하면, 유기농은 친환경농산물이 맞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이라고 생각해서는 틀린다. 풀어 말하면, 한국에서 친환경농산물은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모두를 포함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농산물들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것이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써도 되는 양의 반만 뿌리고 준 농산물을 저농약농산물이라고 분류하며,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에 포함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양은 줄어들었지만 어찌되었건 농약이 쳐지고 화학비료가 뿌려져서 길러진 농산물을 유통업자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홍보하면서 판매를 촉진했을 때, 전혀 위법이 아니다.

<생협평론> 15호 특집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구입할 때 소비자인 내가 갖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상상과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 실체가 일치하는지 혹은 간극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 해보자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의도는 나와 내 가족의 입으로 들어가는 소위 ‘친환경농산물’에 농약과 화학비료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특집 첫 번째 꼭지로 한국사회에

서 친환경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을 말하는지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할지를 법과 제도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짚은 최동근의 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를 배치했다. 꼼꼼하면서도 군더더기가 없어서 독자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의 개념, 특성, 생산 현황과 시장 규모나 소비 특성이 궁금하시다면 두 번째로 편집된 김창길의 글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생산, 시장, 소비 측면에서”를 권한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믿고 먹을 만한 것은 생협 조직들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믿을만한지 궁금하다면 그 다음에 배치된 글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을 권한다. 신신일과 허미영은 공동집필을 통해서 아이쿱생협이 오래 전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네 번째 꼭지는 유기농을 생태운동이며 지역사회운동으로 이해할 것을 옥천의 유기농 생산 현장 사례를 덧붙여 강조하는 권단의 글 “순환과 공생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로, 상당히 흥미롭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의 실제 이야기도 기획했는데, 중부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네 분의 생산자를 모시고 보람과 어려움들을 생생하게 들어 본 좌담회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이야기”가 그것이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떤 것이 의제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책의 맨 뒤 부분에 자리한 해외협동조합소식 꼭지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정보 차원에서 찾아보기를 권한다.

<생협평론>은 이번 호에도 어김없이 공공성 문제를 이슈에서 엮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변해진 기획실장은 OECD 평균의 10배가 넘는 한국의 갑상선 암 수술 비중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주고, 의료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규제 완화가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를 짚는

다. 주택보급률 100% 이상이지만 전세 가격 상승, 월세로의 전환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법으로 공유 주택의 가능성을 탐색해 본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글은 주택 공공성에 맥을 달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협동조합 탐방 연재 꼭지를 맡아 매호 유익한 원고를 보내주고 계신 시사인 김은남 기자가 이번 호에는 '청년주거협동조합 모두들'을 취재해 풀어주었는데, 그 내용이 편집진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이슈의 공공성과 주거 공유 문제와 공명하는 좋은 결과로 나와서 반가웠다. iCOOP



특집 한국사회 친환경농산물의 현실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좌담회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이야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1. 들어가며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환경위기를 극복하고, 먹거리 위기에 직면한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되살려왔던 친환경농업¹이 주춤하고 있다.

그동안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소비, 땅과 물을 살리려는 농민들의 노력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 등 소위 삼박자가 잘 맞아 나가던 친환경농업이 어느 순간부터 위기라는 얘기가 들린다. 몇 년째 참여하는 농민들이 줄고 있고 재배면적도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까지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 대비 15%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목표 달성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위반 사례가 매년 5천 건 이상 적발되면서 신뢰도도 계속 추락하고 있다. 작년에는 공무원들이 영농일지를 대신 작성하고 브로커들이 소개비나 농자재 보조금 등을 노리고 인증기관과 결탁하는 사례가 발생, 연관된 농민들과 인증기관 대표와 공무원들이 구속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친환경농업을 왜곡하고 폄하·훼손하려는 조짐들이 보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민들과 소비자들로부터 심각한 우

¹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을 지칭하는 환경농업, 친환경농업 혹은 환경보전형 농업은 일반(관행)농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유기농업(Organic Farming), 지속가능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재생농업(Regenerative Farming), 생물농업(Biological Farming), 자연농업(Natural Farming), 생태농업(Ecological Agriculture), 대체농업(Alternative Agriculture)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들 다양한 용어 중 '환경농업'을 선택하여 공식화했다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부터 '친환경농업'(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으로 사용, 현재에 이르고 있다.

려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일부 사이비 친환경장사꾼들의 일탈과 범법 행위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허술한 친환경 인증제도나 규정이 더 큰 문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 및 법률(규정)을 고치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업의 발전은 결코 법이나 처벌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친환경농업은 농민, 인증기관, 정책담당자, 그리고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조화롭고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친환경농업 생태계 구성원 가운데 누구라도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전체 시스템은 불안하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은 오로지 생산자인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농민과 소비자의 생각과 행동이 서로 교감 되어야만 제대로 실천이 가능한 농업이기 때문이다.

2. 환경농업육성법 제·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

우리나라에서 환경농업 관련 법률은 1970년대 중반부터 선각자적인 농민들에 의해서 생명농업을 실천해오던 민간단체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농업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환경(보전형)농업을 채택하고 환경농업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청원·의원입법 등 법제화 운동을 추진하였다.

정부가 유기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UR 이후의 농산물 시장개방체제하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1년에 농림부 내에 유기농업 발전기획단을 구성하면서부터이다. 1년 동안 논의를 거쳐 1992년 8월 유기농업²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기농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해 논의를 시작

² 유기농을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과 항생제,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업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하여 1993년 12월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재배에 대한 품질인증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12월에 정부는 환경농업과를 설치하고 UR 이후 대응책으로 중소농의 소득보전을 위해 환경보전형 농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96년 7월에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하여 환경농업육성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고 민간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률제정을 시작하여 전 세계 최초로 1997년 12월 13일 ‘환경농업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1년 후인 1998년 12월 시행되었다.

육성법은 1995년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우리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자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었다. 그동안 논의한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법령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유기농을 포함한 일반친환경농산물,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까지 다섯 종류의 환경(보전형)농산물로 구분하고 ‘표시제’를 도입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들이 환경농업을 육성하도록 중앙정부는 5년마다 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심의하여 환경농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역할을 규정했다.

2001년 환경농업의 명칭을 친환경농업으로 바꾸며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민간)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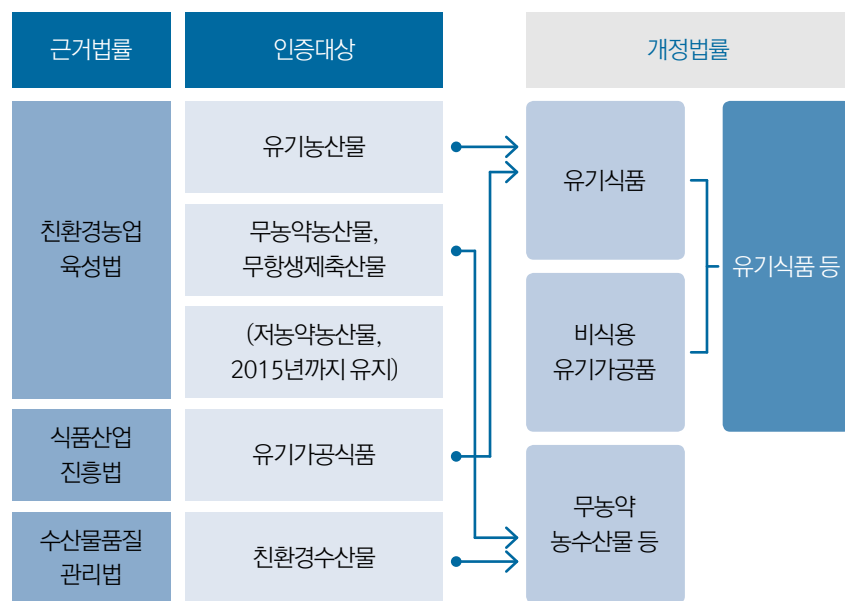
이후로도 관행 농업의 내용을 빼는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수정하고,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종류 간소화(일반친환경 제외, 전환기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흡수), 친환경 인증신청 범위 확대, 친환경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5년),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폐지, 저농약 폐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 마련 등 6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2년 6월 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업법)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전면 개정되어 작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농업법’은 제7장 총 62조로 구성되어 있고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인 시행규칙은 72조의 내용으로 방대하다.

육성법 주요 개정 경과 및 내용³⁾

제·개정시기	주요 내용
1997년 12월 13일	-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 도입
2001년 1월 26일	-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입 - 전문(민간)인증기관 지정
2006년 9월 27일	- 친환경농업의 정의 수정 - 친환경농산물 종류 축소(일반제외/전환기유기를 유기로 흡수: 5종류→3종류) - 인증 신청범위확대(유통업자),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
2009년 4월 1일	-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폐지 - 저농약농산물 폐지(기존 15년까지 유예)
2011년 3월 9일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및 품질인증,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2012년 6월 2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 유기식품 등과 무농약농산물로 체계화 - 인증영역을 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농업자재로 확대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도입
2014년 3월 24일	- 수입 유기식품 등의 관리를 위해 수입 신고 및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 규정 마련 -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처벌기준을 강화

³⁾ 타법률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은 제외하였음



먼저 ‘친환경농업법’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는 친환경농식품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로 인증을 체계화하였다는 데에 있다. 육성법의 한계는 가공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정부(농관원)와 민간인증기관에서 육성법에 근거하여 시행해왔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 등 10개의 민간 인증기관에서, 친환경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따로따로 인증’하여 농가들이 불편과 비용이 가중되었던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였다.

둘째, 단체인증에 대한 심사 절차, 행정처분 강화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가 강화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전체 인증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인증에서 구성원이 현행 2명 이상의 생산자에서 5명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또 ‘생산관리자’⁴를 지정해 소속농가에게 생산지침서 제공 및 교육, 예

⁴ ‘생산관리자’란 생산자 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비심사 등을 거쳐야만 단체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비요건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단체인증 농가 중 인증 기준을 위반한 당사자만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10 농가로 구성된 작목반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관리자 1인을 두고 6 농가 이상에서 인증기준 위반이 적발되면 단체인증 구성원 전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단체행정처분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데, 단체에 연대책임의 행정처분을 준다면 단체인증이 점차 축소되고 이를 초래한 장본인은 지역사회에서 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생산관리자의 경우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소규모 단체의 경우 비용 상승 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동안 무농약 인증 유효기간이 2년이었는데 1년으로 유기농과 동일하게 했고 인증취소 받은 재배 필지에 대해서는 1년간 신청을 제한하였다. 또한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의무화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해 재포장한 후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 농산물 등의 표시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증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 행정 처분된 인증기관들이 매년 다시 부실인증으로 적발되었을 때,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누적되더라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했지만, 이번에는 3년 이내 상습 위반 인증기관은 퇴출이 가능토록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셋째, 인증영역을 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농어업용자재까지 확대했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가공품인데, 우선 유기 사료에 대한 인증이 시행될 예정이다.

넷째,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허용물질로 만든 ‘유기농업자재’가 3년의 공시유효기간 동안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받은 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재의 구분도 2종에서 토양개량용, 작물생육용,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관리용, 충해관리용, 병해충관리용 자재로 세분화해 농

민들의 선택을 쉽도록 했다. 아울러, 유기식품, 무농약농산물 또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에 대한 선정·개정·폐지절차⁵를 마련했다. 농민들이 유기농업자재를 만들어 사용할 때도 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특정 국가에서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어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제도를 도입했다.

3.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우리나라 정부는 친환경농업에 투입하는 자재들의 종류나 양을 기준으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의 3단계로 구분해왔는데 제일 높은 단계가 유기농업이다. 어쩌면 일체의 농약과 비료 등 합성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은 친환경농업이 도달해야 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최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01년부터 친환경인증제를 도입해왔는데도 소비자들은 저농약 농산물을 유기농산물과 비슷하다고 여기고 구매하고 무농약이 유기농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 하나로 통합된 (국새)인증마크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동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현재 친환경인증 외에도 9가지 정도의 인증제도가 운용되는데 모두 새로운 통합마크를 사용하니 구별이 안 가는 것이 당연하다.

‘저농약’이란 농약과 비료를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무농약’이란 화학비료를 주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저농약이나, 무농약

⁵ 농촌진흥청(유기농업자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질)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에 신청하여 자체 기초평가를 실시한 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학계·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심의회에서 최종 평가하여 관련 규정(허용물질의 종류)을 개정토록 절차를 마련했다.

인증이 거의 없다. 이제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으로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친환경농산물은 2009년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신규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중단되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년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이>

구분	2000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농가호수 (호)	2,448	53,478	131,460	198,891	183,918	160,628	143,586	126,746
면적 (ha)	2,039	49,807	122,882	201,688	194,006	172,672	164,064	141,651
출하량 (천톤)	35	798	1,786	2,358	2,216	1,852	1,617	1,181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2000년 약 2천 4백여 호에서 2009년에 19만여 호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신규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중단되면서 그 수가 감소하였다. 2013년도의 친환경 농가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126,746호로 전체농가의 11% 정도이고,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141,651ha로 전체재배면적의 12%이다.

이중 유기인증 농가는 13,957호(11%), 무농약 89,992호(71%), 저농약 22,797호(18%)이다. 2009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4년째 내리막길이다. 지난해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무농약 이상 인증 농가도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전체 농가 중에서는 유기인증농가는 전체 농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이고 전체 농경지를 기준으로 하면 1.2% 정도에 불과하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농가 수로 전년대비 16% 증가한 10,845호이고 이중 유기축산농가는 96호이고 무항생제 농가는 10,749호이다. 유기축산물의 농가 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무항생제 축산물 농가 수는 급증하였다.

또한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비중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3년 민간기관 인증실적은 인증 건수는 전체의 74.5%, 인증농가 수는 77.3%, 면적은 77.2%를 차지하여 모두에서 국가기관의 인증실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친환경농산물 현황>

구분	농산물				축산물		
	유기	무농약	저농약	소계	유기	무항생제	소계
건수(건)	3,773	17,621	3,916	25,310	69	7,020	7,089
농가수(호)	13,957	89,992	22,797	126,746	96	10,749	10,845
재배면적(ha) /사육두수(천)	21,206	98,237	22,208	141,651	64	135,596	135,660
출하량(톤)	116,991	693,296	371,138	1,181,425	23,904	910,723	934,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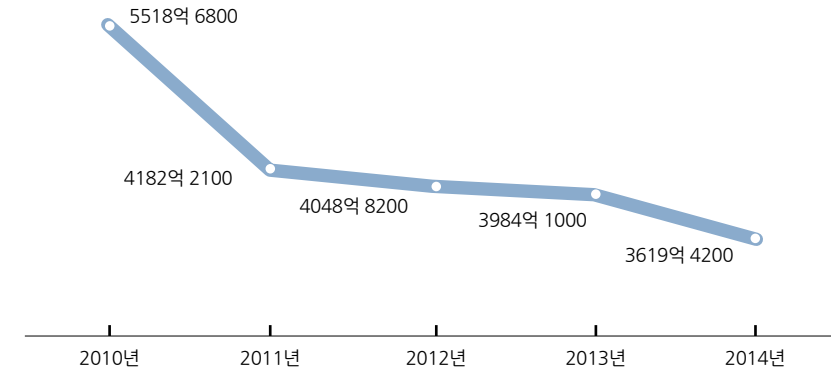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4. 친환경농업의 문제점

1)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수단 결여 및 지원 예산 미흡

지난해 정부가 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재배면적을 15%로 질적인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맞은 정책 수단 및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대단히 미흡하다. 친환경농업의 정책수단(사업/정책)과 예산을 검토해보면 친환경유기

농업 육성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인다. 친환경농업 예산이 4년째 줄어 들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3,619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2%나 감소했다. 예산확보가 사업 추진의 의지 표현이란 점에서 친환경농산물 관련 지표 하락은 곧 내리막길의 예산규모와 일맥상통한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 예산 추이> (단위: 만원)

친환경농업 전체예산 중의 62%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다. 이는 친환경농업의 정부 의존적 관행화, 분절된 산업구조화, 고비용화, 고투입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부분 기존 사업들이 줄거나 새로운 사업(정책) 발굴이 부족하다.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이 없다. 또한 친환경농업 사업이나 정책들이 하드웨어 중심이다. 건물과 시설 건립을 위주로 하는 사업내용들이다.

2) 실험실 위주의 결과중심 인증체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친환경 인증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영농과정보다는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만으로 판별

한다. 이에 비해 선진국은 인증을 위한 심사에서 실험실 분석을 하지 않고 분석은 단속의 도구로만 드물게 쓰일 뿐, 유기농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는다. 분석에 의존한 인증이 아니라 시스템(농가의 운영 방식과 생산자의 자질, 물리적인 환경 등 농업생산 시스템) 인증으로 자리 잡았다. 심사원은 논, 밭, 목장을 찾아가 직접 흙을 만져보고 작물과 동물의 상태를 관찰한다.

이에 비해 우리들은 농산물이 어떤 방식으로 재배되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샘플검사를 한 뒤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내주고 있다. 유기농의 가치는 실험실에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말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 잔류농약검사인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조사가 불가능하며 또한 제대로 농민들이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하더라도 근처 농경지에서의 농약이 날아서 흩어지거나 농업용수의 범람, 유입, 토양 속 잔류, 검사계측기의 정밀도 향상 등으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인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농약의 성분은 8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식약청에 등록된 잔류허용기준은 439가지 성분이다. 그런데 최신의 분석 장비를 갖추더라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최대한의 농약 성분은 현재 245여 종이다. 분석의 한계를 악용해 검출되지 않는 농약성분을 사용하여 만든 농자재로 인해 인증 취소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인증기준에서는 인증심사나 사후관리 시, 작물체(농산물) 위주로 분석을 실시하고,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자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수질 검사와 토양중금속 검사의 경우도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수질 검사의 경우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을 요구하고 있고, 토양도 토양 오염 우려 기준보다 양호한 성적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질과 토양의 기준은 관행농업의 기준으로서 기준 미달의 검사성적이 나왔다면 관행농업도 할 수 없는 악조건의 땅이라는 얘기다. 농민들이 불가

항력적인 요소인 수질기준에 대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농자재 위주의 고비용 구조인 친환경농업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부가 2007년부터 실시한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제(효능 검증 없이 유기농산물 생산 시 사용 가능성만 검토하여 목록으로 공시하는 제도)와 품질인증제(효능이 우수한 유기농자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것)가 2011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농자재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흙(땅)을 살려 농사를 짓는 저투입 순환 농업인데 꼭 목록공시제품이 들어있는 품질 인증품만 써야 인증받기가 편하고 유리하므로 친환경농업이 고비용이 될 수 있고 농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유기농업자재에서 단성분 농약성분이 검출되어 자재를 사용한 농민들의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명

4) 수입 원료 의존의 취약한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산물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도 유기농산물 수입량은 국내 유기농산물 출하량의 11.8% 정도의 1만 4천 톤이 수입되었다. 중국이 전체 수입물량의 64.8%인 9,243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한중 FTA 협상이 추진되면 유기농업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입 품목은 사료작물 5,442톤으로 전체 수입물량의 26.6%를 차지하고, 그밖에 대두, 바나나 순이다.

<유기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톤)

년도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물량(톤)	2,719	8,501	9,892	10,138	13,759	17,015	14,245

자료 : 농식품부

현재 국내 유기가공품시장의 규모는 2011년 현재 3,777억 원 정도이며 이중 약 73%인 2,739억 원이 수입 원재료나 수입 반가공품을 원료로 제품이 만들어지며 약 15% 정도가 수입완제품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국내 유기가공식품은 2013년 419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품목수도 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다. 결국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유기가공품 시장은 약 10%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부분 유기가공식품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다.

<유기가공식품 수입현황>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량(톤)	23,868	25,350	21,293	25,473	28,716	25,551
금액(천달러)	40,358	56,604	39,735	49,349	64,079	59,86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1월 1일부터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제도⁶가 시행되는데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 유통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동등성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 등 수출국의 표시제의 연장 요구에 법적 근거 없이 6월 말까지 인증제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미국을 비롯한 5개국과 유기가공식품 분야의 상호동등성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동등성은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어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⁶ 양국이 쌍방의 제도를 서로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하여 자국 제도에 따라 인증한 제품이 상대국 인증제도에 따른 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유기가공식품과 관련하여 GMO ‘불검출’을 요구하는 기준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GMO의 사용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GMO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보다는 수입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을 보면 국내 유기농업 및 가공산업이 위축되는 것은 분명하다. 국내산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친환경유기가공식품산업 정책을 서둘러 수립 시행해야 한다.

5) 민간인증기관의 난립과 부실

현재의 민간인증기관 난립은 정부 정책 및 관리의 허술한 측면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외국(독일)에 비해 3배나 많은 76개소의 민간 인증기관이 존재하는데 누구나 만들기 쉬웠던 데다 또한 그동안 만들도록 장려해왔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농자재 지원 등 보조금 지원정책으로 인해 인증기관이 결합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민간인증기관의 운영 측면에서 현재의 인증수수료와 관리수수료가 낮아 인증기관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민간인증기관에 의한 부실인증 문제와 보조금 횡령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히 인증기관의 수를 줄인다고 이와 같은 부실인증이 해결될 수는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체계의 수립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은 잔류농약 검사인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법」에서 생산관리자 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이 절실하다.

부실인증기관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인증업무의 민간 이양을 늦추거나 독립인증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데, 담당 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정부가 인증 업무를 총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관련 업무의 민간 이양은 지

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정부는 인증업무가 아닌 인증기관의 관리·감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5. 친환경유기농업의 개선방향

친환경유기농업을 올바르게 하려면 친환경농업 정책에 임하는 농정당국의 자세와 방식부터 달라져야 하고 농민들의 생각과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친환경·유기농업을 하는 것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우리의 흙과 물과 공기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농촌 환경을 살려 나가는 것이 친환경·유기농업이고 이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진실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유기농업의 기본개념은 순환이다. 유기축산을 통한 퇴비를 포장에 투입하고 생산한 작물을 가축의 사료로 이용함으로써 순환식 생산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와 순환적 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체계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농촌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순환적 개념을 현실화하는 데는 기업농보다는 가족농이 유리하다. 유기농업을 좀 더 원칙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직거래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농 방식의 유기농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생태 순환형 유기농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농정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농업정책을 친환경·유기농업 정책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유기농업의 핵심은 저비용·저투입 생산방식 도입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와 경종⁷-축산의 지역순환형 체계의 마련에 있으며, 이를 위해선 지역 내부에서 생산 가능한 퇴비 등의 농자재는 마을 및 개인 단위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자재 지원 중심의 정책을 직접지불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직불제의 금액 인상, 지급기간 연장, 직불제도의 다양화(기후변화직불제, 환경보전직불제) 등이 필요하다.

2016년부터 폐지되는 저농약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저농약 인증농가의 무농약·유기재배 이행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재원에 의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및 공공급식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의 법제화와 그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의무화, 군대급식을 친환경농산물로 전환 추진 등 공공부문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친환경농산물 사용 의무화, 대량급식소 지정, 저소득층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제도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분석 위주와 결과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시스템은 과정을 중시하는 시스템인증체제로 점진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아울러 농촌현실을 고려하여 농민들이 인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형 인증제(PGS,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의 도입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도 유기농산물의 인증에 참여형 인증제도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증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인증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icoop](#)

⁷ 경종농업: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가꾸는 농업(편집자 주)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 론

소비자의 생활양식이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되면서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인 로하스(LOHAS)¹로의 변화 물결로 1990년대 이후 유기농산물 소비량이 매년 20%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유기농 육성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의 친환경농산물은 역사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친환경농법 실천농가가 확대되고 시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농업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0년 이후 매년 약 40% 정도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시장 거래량은 2013년 약 3조 1천억 원으로 전체 농산물 거래량의 약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행태도 변화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자료와 시장전망 자료 및 소비자 설문조사 자료 등을 기초로 한국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¹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 건강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패턴으로 개인에 머무르는 웰빙과 달리 사회와 환경, 후대까지 생각한다.(편집자 주)

2. 친환경농산물의 개념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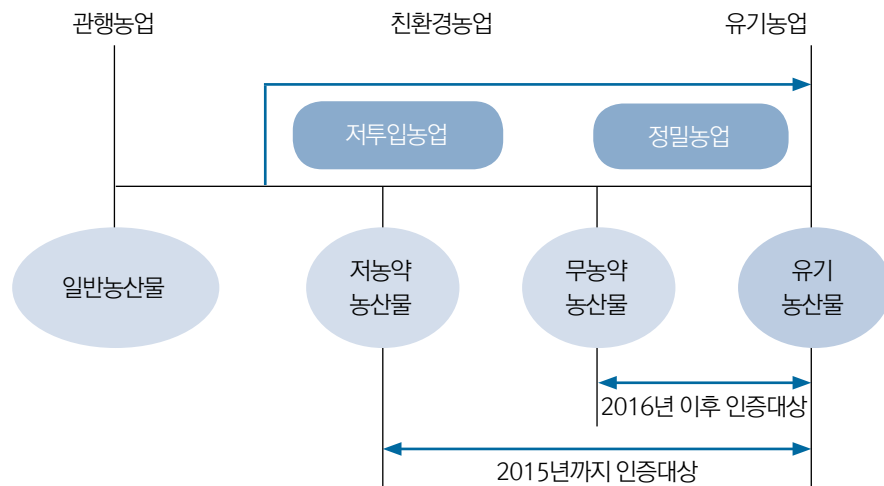
1) 친환경농산물의 개념과 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가축사료 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을 투입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지칭한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되는 속성은 환경성과 안전성이라 할 수 있다(김창길, 김태영, 서성천, 2005, 10쪽).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법률적 개념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705호, 2014. 1. 1 시행)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등을 지칭한다. 여기서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과 축산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 2014. 1. 1 시행)에 제시된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실질적으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차별화하는 것은 산출물의 내용이 아닌 재배방법이다. 결국 어느 특정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자재와 친환경농법에 의해 재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산물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재배방식에 따라 생산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다. 또한 소비자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친환경농법을 적용하여 제대로 생산되는지 모니터링하기도 어렵다.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엄격하게 품질을 검사하여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것이 친환경

경농산물 인증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으로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은 전환기간 이상(다년생 작물 3년, 그 외 작물 2년) 화학비료와 유기합성 농약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3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저농약농산물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합성농약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2 이내 수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범주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까지를 포함하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편으로 20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의 신규 인증은 중단되었으며, 기존에 저농약 인증은 2015년까지만 유효하며 2016년부터는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되고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이 인증대상이 된다(<그림 1>).

<그림 1> 친환경농산물의 범주 구분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물론이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등 유럽 국가와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전환기를 포함한 유기농산물만을 인증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은 유기재배 외에도 저투입재배 농산물인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산물로 관리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주요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단계²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유기 재배	유기	유기	유기	친환경 농산물	유기	녹색 식품	AA급	유기
	(전환기)	(전환기)	(전환기)		무농약		무공해	전환기
저투입 재배	-	(통합 생산, IP)	(종합병해충 관리·IPM)		저농약		A급	특별재배

자료: 김창길, 김태영, 서성천(2006), 12쪽에 제시된 내용을 보완함.

2) 친환경농산물의 특성

친환경농산물이 가지는 특성으로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일반농산물보다 영양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을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대상으로 일반농산물과 비교하여 영양적 차이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힘든 과제이다. 유기농산물을 대상으로 일반농산물과의 영양성분을 비교한 부분적인 연구 성과가 제시되고 있다.³ 한국식품연구원이 수

² ()내에 제시된 단계는 실제로 인증대상 단계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친환경농업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분류된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³ 유기농쌀의 기능성 조사결과 총 페놀화합물과 phytic acid 함량은 유기재배 쌀에서 89%와 23% 각각 더 많았고 항산화 활성도 유기재배 쌀에서 일반 쌀보다 4% 더 높게 나왔다. 한편 관능평가 결과, 쌀 찰기, 맛, 식미감 분야에서 일반 쌀이 유기재배 쌀보다 밥맛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박창현 외 4인, 2010), 일본의 유기재배 채소의 영양성분 분석자료에 따르면 유기재배된 채소는 비타민C 함량이 상당히 높고, 초산테질소 성분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井上駿·有田俊幸·森良子, 2003).

행한 친환경농산물의 성분함량 분석결과에 따르면 피트산(Phytic acid) 성분의 경우 유기농 쌀 0.86~1.04%, 일반 관행재배 쌀은 0.76~0.85%로 유기농 쌀이 관행 재배된 쌀에 비해 0.1~0.19% 이상 풍부하게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진봉 외 7인, 2006). 필수 아미노산 함량의 경우도 유기농 쌀이 일반관행으로 재배된 쌀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 5~10% 이상 높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기농으로 재배된 쌀의 단백질 함량이 관행재배 쌀의 단백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식미에 영향을 주는 인자의 하나인 단백질 함량은 낮을수록 고품질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농으로 재배된 쌀과 일반관행으로 재배된 쌀의 성분, 품질 및 식미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기농으로 재배된 쌀의 성분이 일반관행으로 재배된 쌀에 비해 성분, 품질 등이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식미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단백질, 산가 그리고 아밀로스 함량들도 유기농으로 재배된 쌀이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은 상품적 특성에서 보면 안전성의 품질 특성이 중시되는 신뢰재로 정보의 비대칭적(information asymmetry)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또는 후에도 해당 품목이 가진 기능이나 효용을 확인할 수 없고, 해당 농산물의 정보보유량 또는 정보의 질(안전성과 환경성 등)은 생산자만이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관련 정보는 불균형적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가치의 인식은 경험과 상당한 학습효과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안전성과 영양적 가치 등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한 후에도 정보의 비대칭은 계속되므로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 소비자의 주요한 선택기준으로 맛, 외관, 신선도, 영양가, 안전성, 친환경성 등을 들 수 있다. 외관과 신선도는 구입 전에 정보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고 맛은 구입 후 시식을 함으로써 어

느 정도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과 영양가는 구입 후에도 정보의 비대칭이 계속되며, 친환경성의 경우도 상당기간 정보의 비대칭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식별은 인증제도에서 제시된 인증라벨을 통해 이루어진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3.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09년까지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201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수는 연평균 38.9%, 인증면적은 42.4%, 출하량은 34.0%의 증가율로 각각 증가하였다(<표 1>). 저농약농산물 신규 인증이 폐지되면서 최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은 증가하였으나, 저농약 농산물은 2008년 이후 증가 추세가 꺾이고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를 보면, 2007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후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의 가장 큰 특징은 2011년부터 무농약농산물 출하량이 저농약농산물 출하량을 추월하였다는 것이다(<그림 3>). 인증단계별로 살펴보면 유기농산물의 경우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최고치인 168,256톤을 나타내었으나 2013년에는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무농약농산물은 2010년 1,039,576톤으로 최대 출하량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농약농산물은 2008년 1,519,070톤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해 왔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4.0% 감소한 370,898톤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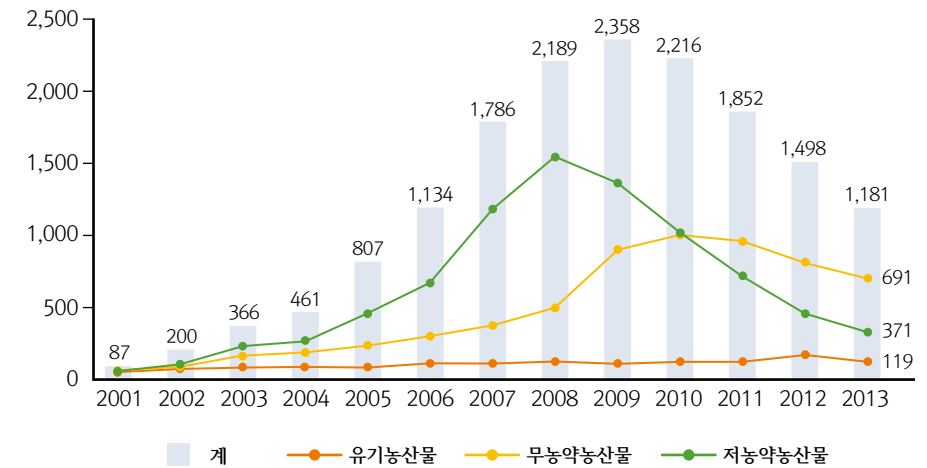
<표 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단위: 호, ha, 톤, %)

구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감률
유기	농가수 (호)	353	9,403	10,790	13,376	16,733	13,963	35.9
	면적 (ha)	296	13,343	15,517	19,311	25,467	21,210	42.8
	출하량 (톤)	6,538	108,810	122,243	123,314	168,256	119,290	27.4
무농약	농가수 (호)	1,060	63,653	83,136	89,765	90,325	89,992	44.8
	면적 (ha)	876	71,039	94,533	95,253	101,657	98,233	48.2
	출하량 (톤)	15,694	879,930	1,039,576	979,791	841,513	691,238	37.1
저농약	농가수 (호)	1,035	125,835	89,992	57,487	36,025	22,797	29.4
	면적 (ha)	867	117,306	83,956	58,108	37,165	22,209	31.0
	출하량 (톤)	13,174	1,369,034	1,053,702	749,136	488,466	370,898	32.1
합계	농가수 (호)	2,448	198,891	183,918	160,628	143,083	126,752	38.9
	면적 (ha)	2,039	201,688	194,006	172,672	164,289	141,652	42.4
	출하량 (톤)	35,406	2,357,774	2,215,521	1,852,241	1,498,235	1,181,426	34.0
경지면적(ha)		1,888,765	1,736,798	1,715,301	1,698,040	1,729,982	1,711,436	-0.8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그림 3>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2013년도 기준 전남이 총 70,437ha로 전국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의 49.7%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경북 16,622ha(11.7%), 충남 11,451ha(8.1%), 경남 11,299ha(8.0%), 전북 8,667ha (6.15), 경기 8,554ha(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북과 제주도는 각각 4,630ha(3.3%)와 2,680ha(1.9%)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친환경농법별 재배면적에 단수를 적용하여 생산량을 추정하고 농법별로 시장으로 판매되는 양을 추정한 후, 유통업체의 수수료, 유통비용,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 추정결과 곡류의 유통규

모는 9,701억 원으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의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쌀이 8,751억 원, 채소류는 9,200억 원이었으며, 각각 전체 유통규모의 28.4%와 29.9%를 차지하였다. 과실류는 전체 유통규모의 22.7%인 6,986억 원으로 추정된다(<표 2>).

<표 2> 2012년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

(단위: 억원, %)

구분	곡류	쌀	채소류	과실류	서류	특작기타	계
유통규모	9,701	8,751	9,200	6,986	1,061	3,860	30,809
	31.5%	28.4%	29.9%	22.7%	3.4%	12.5%	100.0 %

자료: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2013).

2012년도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단계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유기농이 13.2%인 4,081억 원, 무농약이 55.7%인 1조 7,175억 원, 저농약이 31%인 9,552억 원으로 추정된다(<표 3>).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치를 보면 유기농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4,575억 원에서 2014년 5,449억 원, 2015년 6,510억 원, 2020년 1조 4,296억 원으로 전망된다.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2013년 1조 9,322억 원에서 2014년 2조 2,981억 원, 2015년 2조 7,444억 원, 2020년 6조 453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저농약 농산물은 2013년 7,476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4,779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한다.

<표 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단계별 시장 유통규모(2012)

(단위: 억원, %)

구분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계
곡류		1,748	7,501	452	9,701
	쌀	1,588	6,738	426	8,751
	기타	160	764	26	949
채소류		1,325	5,104	2,770	9,200
과실류		207	546	6,232	6,986
서류		211	784	66	1,061
특작기타		590	3,239	31	3,860
계		4,081	17,175	9,552	30,809
비중		13.2	55.7	31.0	100.0

자료: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2013).

<표 4>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원, %)

구분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20
유기농	2,426	3,000	4,081	4,575	5,449	6,510	7,891	14,296
무농약	13,178	16,420	17,175	19,322	22,981	27,444	33,369	60,453
저농약	18,514	12,257	9,552	7,476	6,005	4,779	-	-
전체	34,117	31,677	30,809	31,373	34,434	38,732	41,259	74,749

자료: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2013).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특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조사 대상자와 조사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화하여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친환경농산물

에 대한 소비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1년 12월 ~ 2012년 1월에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2012).⁴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 계층을 분류해 보면 지속적인 소비계층(1개월에 4회 이상 구입)이 45.1%, 보통 소비계층(1개월에 4회 미만 구입)이 46.3%, 친환경농산물 관심계층(6개월에 1회 이상 구입)은 8.6%로 나타나 91.4%가 보통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소비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동기를 살펴본 결과 ‘안전성 및 가족건강’이 59.9%, ‘영양가가 높을 것 같아서’ 10.5%,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 때문에’ 9.3%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구입 장소로 대형할인점이 40.0%, 농협계통(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15.3%,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13.6%, 직거래단체 11.8%, 백화점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구입처를 선택한 이유로는 ‘구입의 편리성’ 31.1%, ‘판매처나 판매자에 대한 신뢰’ 23.5%, ‘다양한 품목단위와 지속적인 공급’ 20.6%, ‘타 판매처에 비해 저렴한 가격’ 16.7% 등으로 나타났다. 구입 장소별로 1순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할인마트는 구입의 편리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직거래, 백화점, 전문매장, 농협계통 등은 신뢰성, 홈쇼핑은 저렴한 가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제도에 대한 만족수준은 ‘높다’는 응답이 53.7%로 절반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만족수준도 ‘높다’는 응답이 각각 50.4%, 55.4%로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에 대해서는 일반농산물 대비 가격수준의 경우 ‘비싼 편’ 75.8%, ‘매우 비싼 편’ 17.1%로 나타나, 비싸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92.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과 비교한 가격수준의 경우 ‘비싼 편’ 66.3%, ‘매우 비싼 편’ 12.8%로 나타나 비싸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79.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섭취로 인한 건강증진 여부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2.0%, ‘보통이다’ 24.5% 등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의향을 조사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구입경험자의 경우 ‘구입비중 확대’가 41.1%, ‘현 수준 유지’가 39.4%, ‘구입비중 축소’ 12.6% 등으로 나타나 현행 소비수준 유지 및 확대비중이 80.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비 구입자의 경우도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구입 하겠다’는 반응이 74.3%로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개선된다면 향후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 계층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농산물 구입 경험자의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가격이 비싸서’가 54.6%, ‘적당한 구입처를 찾기 어려워서’가 16.6%,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 12.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비 구입자의 경우에도 ‘가격이 비싸서’가 54.0%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 20.0%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학교급식 확대’ 53.0%,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23.0%, ‘홍보활동 강화’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 결론

최근 국내외적으로 웰빙 트렌드와 로하스로의 변화 물결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유기농 짙은 일반 관행재배 쌀보다 성분과 품질에서 영양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친

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성향과 구매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기간: 2011. 12. 30~2012. 1. 6). 설문조사 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 구입경험자 421명, 미경험자 105명 등 총 52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2012).

환경농산물 생산은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되고 2016년부터 저농약인증이 폐지되므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증가 추세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나, 친환경농산물 소비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농약 실천농가가 무농약재배 및 유기재배 농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영양적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주요 동기는 안전성 및 가족 건강이며, 구입 장소로 대형할인점과 농협계통 매장(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소득과 비교한 가격수준의 경우도 비싸다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의 구입 의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현행 소비수준 유지 및 확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학교급식 확대가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프리미엄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친환경직불제의 단가를 상향조정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통해 생산비 절감, 유통 인프라 확대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과 학부모의 적절한 분담 등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의 친환경농업을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조망해 보면 분야별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미래 농업의 성장분야로 요약될 수 있다. 친환경농업이 미래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 농업인, 소비자, 업체, 연구자 등 관련된 주체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수행이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4). 친환경인증통계정보(출처: www.enviagro.go.kr)

김창길·김태영·서성천(2005).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 연구보고 R5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이용선·이상건(2008).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성향과 마케팅 전략』, 연구보고서 p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2012).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소비실태와 시장전망』, 연구보고서 p15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2013).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 『KREI 농정보 커스』, 제5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장현 외 4인(2010). 유기쌀과 일반쌀의 품질, 이화학적 특성 및 기능성 비교,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9-5: 725-730.

황진봉 외 7인(2006) 친환경농산물의 성분함량 및 품질상의 차별성 연구, 한국식품연구원, 농림부.

井上駿・有田俊幸・森良子(2003). 「有機農業：岐路に立つ食の安全政策」. 日本有機農業学会編、コモンズ、. pp.174-185. [iccoop](http://iccoop.org)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신신일(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아이쿱농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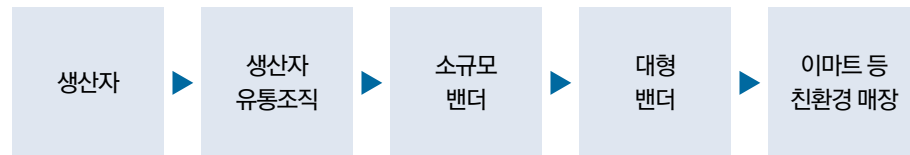
1. 생협의 물품운영 시스템

생협의 물품운영 시스템은 아래의 3가지를 기본 정책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1) 시장 외 유통

생협의 물품 운영은 새로운 시장의 물품운영이며 새로운 시장이란 것은 새로운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유통채널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협의 유통은 시장 외 유통이며 이는 계약생산과 직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생협 외 친환경 타 단체의 유통방식은 기존 시장의 유통방식과 비슷하며 아래와 같다.

<생협 외 친환경 타 단체의 유통방식>



위의 방식에서 생산자는 자신의 물품이 최종 어디에서 판매되는지 알 수 없으며 몇 차례의 유통라인을 거치는 동안 다른 물품이 혼입되는지 알 수 없고, 시장가격의 폭등과 폭락의 리스크에 온전히 노출되어 있다. 생산자

는 바로 다음 단계 유통관계와 더 높은 가격만을 협상하면 된다. 최종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과의 소통과 이에 맞춘 물품 생산의 관계는 너무나 멀리 있다. 또한 다음 단계의 유통단계도 얼마의 이익을 남겨서 파는가가 가장 우선이 된다. 이처럼 생산우선정책의 기존 시장은 자본 중심의 시장에 맞춘 정책이었다.

생산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소수의 새로운 요구는 특정한 영역의 요구여서 상품 판매 부진, 생산비용 증가라는 위험이 수반되므로 이를 외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 광범위한 다수의 요구를 감당해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다양한 거래처, 보편적인 상품을 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소비자가 원하는 독자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면 기존 시장에서 공급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바로 직거래(시장 외 거래)를 전제로 출발했던 협동조합들이 왜 유통업체로 변해 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맞춤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장, 즉 사람중심의 경제를 그 어떤 곳에서도 구축하기 어렵다.

시장 외 유통이란 것은 무엇인가? 시장을 통해 수요 공급을 조절하지 않는 유통을 시장 외 유통이라 한다. 시장 유통은 가격을 통해 수요 공급이 조절되는 유연성, 능동성이 존재하지만 시장 외 유통은 경직되어 있고 비탄력적이다. 시장 외 유통이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협이 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신뢰 때문이다. 시장 유통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이익 추구가 시장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이기 때문이다.

2) 계약생산 - 직거래

소비자 요구를 담아내면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계약생산 - 직거래를 유지하는 것이다.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유통방식이다.

직거래를 위해 우선 품목을 정하고 물량을 정하고 가격을 정한다. 이것은 곧 계약생산이란 의미이다. 파종 전에 계약하기도 하고 파종 후에 계약하기도 하는데 판매대행제는 파종 전 계약이 중심이다. 파종 전 계약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신뢰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 파종 전 계약의 단점은 수확시기의 시장 흐름 예측에 변수가 많다는 것이다. 예측의 오차 범위를 넘어서면 수급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이처럼 변수가 많은 생산지 직접 계약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신뢰를 높이고 가격협상의 갈등 비용을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계약 생산의 내용은 가격, 물량, 품질, 시기들에 대한 것으로 소비자 조합원 규모와 전년도 소비 규모 등에 근거한 자료를 수집한 예측 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지의 예측 생산은 전년도 가격, 생산량, 기후 같은 것들이 주요한 요인이 되며 모든 예측에는 항상 일정한 오차가 발생한다. 예측 오차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다양한 대응 수단이 존재하는 데 비해, 생협의 계약 생산은 오차를 대체할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오차가 발생하였을 때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계약 생산의 오차 발생 - 물량이 남았을 때 수요 공급 조절방법

공급이 과잉되는 경우, 시장에 파는 것이 기본이지만 시장에 판매할 경우 손실이 크다. 이때에는 매장에 진열해 소비자 접촉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다.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려면 소비자의 노력과 책임이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벌이는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책임 소비 운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2013년 봄의 경우이다. 오이, 브로콜리, 참외 등에서 책임소비 운동을 전개하였다.

책임 소비 물량이 많아질 때는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장에 팔 물량과 책임소비를 할 물량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물품 운영의 과제이기도 하며 이는 물품운영담당자의 전문적인 물품운영 노하우

가 동반되어야 한다. 책임 소비로 분배한 물량에 대한 손실은 가격기금을 통해 보전한다.

(2) 계약 생산의 오차 발생 - 물량이 모자랄 때 수요 공급 조절방법

계약 생산에서 공급 부족은 대체로 기후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인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부족량이 클 때는 사전에 계약을 하지 않은 생산자의 물량을 수급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물품을 수급할 경우 계약 생산의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물품을 우선으로 수급하고, 수급 물품은 모두 철저한 사전 검사 후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량을 충분히 수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때는 1인당 이용량을 제한해야 한다. 2010년 극심한 냉해와 배추 파동 때 이용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조합원 간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3) 생산지 가격보장 정책이 아니라 소득 보장 정책

2003년 의성, 원주 사건, 2004년 더불어 사건 등은 생협의 중심 생산자들도 신뢰를 해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과, 지금까지의 관계는 파트너가 아닌 '거래처' 수준의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게 했다. 또한 예전의 관계성(조합원, 생산자, 직원)으로는 현재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새로운 관계성 즉 공동의 목표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거래관계 이상의 약속, 책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은 큰 성과를 보지 못한 채 유지되어 왔던 생산자 가격 보장 정책에서 소득 보장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소득은 (가격 × 판매량) - 비용 + 기타소득에 의해 결정되므로 가격을 아무리 생산비에 맞춰 높이더라도 판매량이 적거나 비용이 높으면 소득은

높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물의 단가를 높이는데 집중하는 시장 유통에서의 생산비 보장정책은 실질적인 소득 보장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생산자의 총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판매량을 확대하고 1차 생산자의 가공 합작을 통해 기타소득을 창출하여 소득보장을 실현하는 것이 소득보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매선수금 제도를 통한 영농자금 지원, 출하 장려금, 각종 재해 보호기금, 가격안정기금, 각종 지원책(시범포, 시설지원, 농지클러스터) 등은 이러한 소득을 보완하는 역할로 기능하고 있으며, 앞으로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가동의 결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iCOOP생협 생산관리시스템

iCOOP생협은 1997년 출발 시기부터 조합원이 바라는 안전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남다른 정책을 펼쳤다. 농산물 인증과 유통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모든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 왔다. 8년여의 기간 동안 160억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여 'iCOOP인증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 지역별로 인증센터 직원을 배치하여 생산물품(2013년 기준: 2,673농가)의 철저한 점검과 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1) 인증센터 생산관리시스템

(1) 인증센터 운영배경

① 조합원의 신뢰를 깨뜨린 혼입사고 발생

iCOOP생협은 1997년부터 오늘날까지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천해 온 직거래운동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흔히 말하는 '의성양파혼입사건' '원주사건' '더불어식품사건'이다.

먼저 '의성양파혼입'이라 불리는 사건은 2002년도에 ***씨가 의성 인근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은 생산자로부터 양파를 약 88톤을 수집하였고, 2001년 경지 정리한 새 땅에서 생산된 인증이 없는 양파를 70톤 정도 매입하여 약 150톤가량 물량을 확보하였다. ***씨는 이 양파를 iCOOP생협에 62톤, 수도권 사업연합 40톤, 여성 민우회 5톤, 일반상인에게 10톤을 납품하였고, 나머지는 관리소홀로 폐기하였다.

이 사건은 ***씨가 2002년산 양파가 생산부진으로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미인증 양파를 매입하여 자신의 무농약 인증사항으로 포장하여 직거래 단체에 납품한 사건이다. 물론 ***씨는 이러한 사실을 직거래 단체에 알리지 않고 납품하였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같은 동네 주민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당하게 되었다. 2003년 4월 위의 사실을 당시 한국생협연대 생산개발부에서 알게 되었고 조사 과정 중에 ***씨는 2000년에도 한살림 생산자로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음으로 '원주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2003년 6월 원주생협이 상회를 통해 잡곡을 매입해왔으며, 게다가 그 상회가 수입산 기장을 국산 기장에 혼입해서 판다는 사실을 원주생협이 알았음에도 그 상회와 계속 거래를 해온 사건을 일컫는다.¹ 2001년 6월에 iCOOP생협이 풀무생협, 원주생협과 함께 품목별 생산량과 소비량을 정하는 회의를 했을 당시 원주생협은 "직접 수매를 하고 부족한 양은 원주농협에서 수매한 것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한 원주생협이 잡곡이 혼입된 것을 알면서도 iCOOP생협과 거래를 지속하여 생협 조합원과의 신뢰를 깨뜨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불어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은 iCOOP생협과 오랫동안 거

¹ 당시 잡곡의 경우는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iCOOP생협의 잡곡 취급기준은 생산자 매입을 원칙으로 하였다.

래를 해왔고 동시에 생산자회원으로 가입해있던 주식회사 더불어식품이 원재료에 수입밀과 팥 등을 혼입하여 사용한 것이 2004년 6월에 검찰에 적발되면서 iCOOP생협이 알게 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원산지 허위 표시로 분류했지만, iCOOP생협에게 이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미하는 바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실천해 온 직거래운동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있어서는 안 될 행위였다.

그러나 iCOOP생협은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생산자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진실을 공개하고 사과하면서 진심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 상호 확인된다면 생산자에게 재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주)더불어식품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선 문제의 진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더불어식품이 수입농산물을 혼입한 이유는 국산농산물과의 가격 차이를 통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재료 수급이 불안정했고 그로 인해 영업 행위가 지속될 수 없을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공급 재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더불어식품이 공급재개를 하던 중 또 다시 혼입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데에 있다. 한 번의 실수에 대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여 조합원들이 용서해줌에 따라 공급재개를 하였음에도 다시 혼입하는 행위로 인해 iCOOP생협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상태로 가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무너트릴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했다.

② 생산유통인증시스템의 개발

- 철저한 관리와 정직, 공개, 투명한 운영 원칙 구현

2003년 6월 원주(기장 혼입)와 의성(양파 혼입)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후, iCOOP생협은 2003년 10월에 혼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

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생산인증 외에 유통인증제의 개발을 필요로 했다. 필요성이 제기된 지 5개월 가량이 흐른 2004년 3월 정기총회에서 유통인증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곧 이어진 이사회에서 “유통인증제 도입 및 활용” 프로젝트를 성공회대학교로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6월에 또다시 더불어식품의 수입산 원자재 혼입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iCOOP생협은 유통인증제 도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으로 보고 9월에 (주)우리농업을 법인으로 분리하고, 유통인증센터와 온라인도매시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2004년 10월이 되자, 성공회대학교 경영유통연구소에 의뢰했던 유통인증제와 관련한 연구가 발표회를 열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준비 작업은 거의 완성되어갔다. 유통인증제는 현재의 인증제도가 생산인증이기 때문에 생산과정의 투명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유통과정의 혼입문제를 다룰 수 있는 대안적인 인증제도로 제안되었다.

현재의 시장은 누구라도 혼입과 위조, 도용이 가능하다. 친환경 농산물이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다만 생산만 관리하고는 친환경 농산물이 소비자에게까지 도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유통이라는 전체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신력 있고 전문적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유통되는 총 물량을 검증하는 방식인 유통인증제는 구체적으로는 ‘조직화된 투명한 시장’ 안에서 생산에서부터 최종구매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출하생산자의 이력, 출하물량, 유통경로 등의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더이상 가짜 유기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바뀌치기나 섞기 등은 불가능해졌다.

2004년부터 준비해온 유통인증제를 일부 품목, 일부 생산지를 통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05년 1월에 청원흙살림과 흥성풀무생협에서 사전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유통인증제 시범실시와 관련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2월에는 청원흙살림에서 시금치를, 풀무생협에서 상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시기에 성공회대 경영유통연구소와 정보통신연구소와 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계약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혼입으로 인해 신뢰가 떨어지고 나아가 불신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책이었다.

이렇게 설립된 iCOOP인증센터는 생협에 출하되는 모든 물품의 재배과정(파종에서 수확까지), 출하과정, 유통과정을 점검하고 있으며, 3단계 검사시스템(재배과정, 모든 물품 출하 전 검사, 불시 검사)을 통해 물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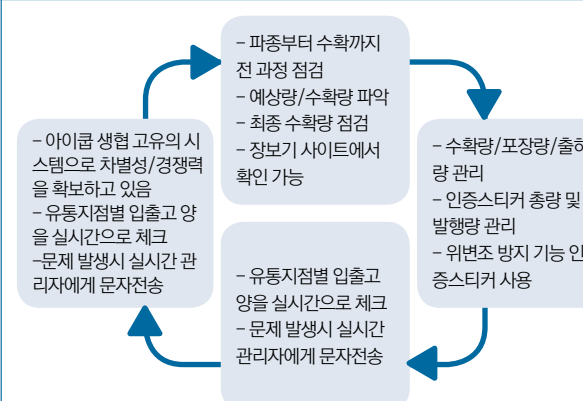
(2) iCOOP인증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iCOOP생협의 물품은 조합원들을 위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물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iCOOP생협에 공급되는 모든 친환경농산물은 iCOOP인증센터의 산지 관리를 통해 재배과정에서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지 여부 등 친환경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확 후 출하과정에서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 정보를 물품 운영 담당자들에게 전달하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친환경농축산물혼입방지관리방법)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iCOOP생협에서 취급하는 모든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성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그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하고 있다.

<iCOOP인증센터의 관리시스템>

관리 단계		세부 내용						
1단계	재배과정	· 재배과정 : 파종에서 수확까지 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하고 있음 (재배과정에서 예상수확량을 수시로 파악하고, 재배과정에서 위험요소 파악 후 조치) · 1단계 검사 실시 : 생육 중 검사(인증심사과정, iCOOP인증센터 점검과정 중 계절적 요인 및 사안별로 위험요소가 발생하는 예상 시점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						
2단계	출하과정 (출하 전 100% 검사)	· 출하과정 : 수확 후 저장 및 출하과정 점검(생산지의 출하량과 최종 수확량 점검, 인증스티커를 통해 생산품 총량, 발행량 관리) · 2단계 검사 실시 : 모든 품목에 대해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245 성분+알파)와 맞춤 검사 실시 ·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출하하지 않고, 검출원인을 조사하여 생산자가 해당 인증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조치함. · 출하 전 검사 현황(2013년)(수급 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출하 전 검사 건수</th><th>검출 건수</th><th>검출 농가 수</th></tr> </thead> <tbody> <tr> <td>2,185</td><td>48</td><td>96</td></tr> </tbody> </table>	출하 전 검사 건수	검출 건수	검출 농가 수	2,185	48	96
출하 전 검사 건수	검출 건수	검출 농가 수						
2,185	48	96						
3단계	유통과정 (혼입방지)	 ■ 생산유통인증 전산시스템 (Korea Certification of Distribution) 혼입이 발생할 경우, 먼저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신속히 원인 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소재를 가림 - 재배과정과 유통과정을 관리하여 혼입을 방지하는 시스템(수확량과 출하량을 비교하여 적정 여부를 점검) - 구매한 물품의 유통인증번호로 생산이력, 필지이력, 유통이력 등을 소비자가 장보기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 - 특허획득(2008년/친환경농축산물혼입방지관리 방법)						

4단계	유통 중 불시 검사	- 3단계 검사 실시 : 매월 동절기 10품목 이상, 하절기 20품목 이상을 검사하고, 축산물/사료는 항생물질 4계열 등을 검사하여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지함. - 유통 중 불시검사 현황(2013년)		
		항목	내역	비고
		검사건수	499건	
		검출건수	8건	5건(농약검출), 3건(항생물질 4계열 검출)
	외부기관 검사 (품관원, 지자체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 등 외부기관에서 자연드림 매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 검사하고 있음. · 외부기관 검사 현황 (2013년)		
		총 검사 건수	검출	불검출
		370	0	370

※ 아이쿱생협은 출하 중에 발생한 모든 안전성 사고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책임을 가려 리콜 등 보상을 함.

- 출하 중에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물품 공급 중단 ▷ 인증센터에서 검출원인을 조사, 생산자는 해당인증기관에 자진신고 ▷ 조합원에게 사고 내용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개별로 연락하여 ▷ 리콜 등 조합원에게 배상해 줌.

- 출하 전에 발생한 사고(농약 사용, 화학비료 사용, 자재 오사용, 혼입, 점검 및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출하하지 않음.

※ 유기농업 자재에서 농약검출 사고가 지속적(유기농업자재 “참청” 취소 이후, 10개 자재에서 농약검출)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이쿱인증센터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자재를 신속히 파악하여 생산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등록 취소 전에 문제의 자재를 사용한 농가의 물품은 출하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하여 불검출일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등록 취소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류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출하하지 않음.

※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재배과정)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불시에 잔류농약검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음.

2) iCOOP생협의 3단계 검사시스템

iCOOP생협은 생산과정, 출하 전, 유통과정 등 3단계 검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 안전 기준을 높여가고 있다.

1차 농축산물의 3번 검사 시스템은 아래의 단계에 따라 공인검정기관에 의뢰하여 245개 성분 이상의 농약잔류검사 및 항생물질 검사 등을 실시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3번 검사 시스템>



생산과정 1번



출하전 1번



유통과정 1번

- 1단계 : 생육 중 검사(인증심사과정, iCOOP인증센터 점검과정 중 계절적 요인 및 사안별로 위험요소가 발생하는 예상 시점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
- 2단계 :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와 맞춤 검사 실시(모든 품목)
- 3단계 : 불시 검사(1차 농산물은 동절기 10품목 이상, 하절기 20품목 이상을 검사하고, 축산물/사료 항생물질4계열 등을 검사하여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지함)

* 출하 중에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물품 공급 중단 ▷ 인증센터에서 검출원인을 조사, 생산자는 해당인증기관에 자진신고 ▷ 조합원에게 사고 내용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개별로 연락하여 ▷ 리콜 등 조합원에게 배상해 줌.

※ iCOOP생협의 정보공개 및 보상 시스템

iCOOP생협은 출하 중에 발생한 안전성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iCOOP생협이 책임지는 리콜시스템을 운영하여 조합원 보상체계를 실시하고 있다.

3) 친환경인증기관 및 식품검사기관 운영

(1) 친환경인증기관 운영

iCOOP인증센터(2005년 설립)가 생산관리를 하면서 각 인증기관마다 상이한 인증기준의 적용, 인증기관의 소극적인 사고처리, 부실한 인증을 경험하였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인증기관을 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라는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2008년 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제 40호로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을 받아서 신뢰, 정직, 객관적인 기준으로 깐깐하게 인증업무를 실시한 결과, 설립된 지 만 3년이 되지 않아 2010년 경기도 거점인증기관에 이어 2011년 우수인증기관, 2012년 최우수인증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었다.

(2) 식품검사기관 운영

2011년 9월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의 식품검사기관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아 농산물 및 식품의 검사·분석을 하게 되었다.

2012년 3월 8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자가품질위탁검사를 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제77호)'으로 승인되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법에 따라 철저한 관리와 첨단 분석장비, 검사능력, 우수한 검사원 등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지정을 받으며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식품검사센터>



4) iCOOP생협에만 있는 독자검증제도²

안전성 중심의 친환경인증기준으로 인해 진정한 유기농업을 추구하는 것이 어렵다. 퇴비를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퇴비 재료인 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고, 유기사료를 수입하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형 유기농업으로 발전해가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iCOOP생협에서는 독자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성 뿐 만 아니라, 유기농의 본래 의미인 순환성(경·축 순환 등), 지속가능성(구입자재 최소화 등), 생물다양성(재배지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 발전) 그리고 신뢰성(기록 등)을 평가하는 인증기준을 만들고 진정한 유기농업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유도해가고 있다.

생산과정의 신뢰 확보, 유통과정 혼입 방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유기농업 실현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독자인증 제도를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

² 친환경인증의 단점을 보완해서 진정한 유기농업을 추구하는 검증체계

(1) 독자인증 마크 및 등급

안전성, 순환성, 생물다양성(축산은 동물복지), 지속가능성, 신뢰성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생산자를 평가하고 등급(AAA, AA, A)을 부여한다.



(2) 2013년 독자검증 물품

구분	건수	농가/업체수	비고
농축산물	11	296농가	채소 및 과일, 축산
가공물품	10	10업체 23품목	
계	21		

※ 21건의 독자검증 중 15건은 AAA를 받았고, 6건은 AA를 받았는데 그 중 5건이 축산부분임.

(3) 독자인증 준비과정

- 2005년 : iCOOP인증센터 설립
- 2007년 : 새로운 인증에 대한 모색
- 2008년 : 친환경유기농 인증기관 설립
- 2011년 : 영국토양협회 방문, 독자인증 시범평가 실시, 독자인증 공청회 실시
- 2012년 : 독자인증 사업계획 수립, 독자인증 내용 보완 및 시범실시
- 2013년 : iCOOP생협 독자인증 선포식 및 시행

iCOOP생협은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임을 믿고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 노력해오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정보 공개, 조합원과의 약속을 위반할 때 리콜처리, iCOOP인증센터 직원의 밀착된 집중 관리, 조합원이 참여해 함께 만든 가공식품 그리고 회원조합들의 물품 최종선정권한 등 다른 곳에서는 시도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민주적 운영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iCOOP생협 물품은 소비자 조합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iCOOP](#)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권 단(옥천순환경제공동체 운영위원장)

1. 유기농의 생태적 순환과 사회적 순환(슬로푸드와 로컬푸드)

이 엄혹한 시대에 유기농이란 무엇인가?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가장 약한 곳을 후벼 파고 생채기를 내는데 그 아픔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면 유기체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단절이고 끊어짐을 의미한다. 발 꼬트머리에 가시가 찢려 피가 철철 나는데 머리에 서 인지를 못하고 온 몸뚱아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 몸뚱아리가 아닌 것이다. 이미 신경이 끊어진 채로 피가 통하지 않아 이내 썩어 문드러지게 될 것이다. 조그만 가시랭이가 박혀도 온 몸뚱아리의 신경이 곤두서 거늘 무감각하고 무신경하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기체로서의 기능이 고장이 난 것이고 그 자체로 생명에 심각한 위기가 온 것이다. 발 꼬트머리부터 머리꼭지까지 수많은 실핏줄이 얇디얇은 모세혈관의 피 돌기가 되지 못한다면 살 수 없을 것일진대 순환이란 그런 것이다. 거침없이 흘러내리면서 모든 곳에 생명의 기운이 돌고 달아야 비로소 모두가 살 수 있는 공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적자만 생존하는 것이 아닌, 승자만 모든 것을 가지는 독식이 아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닌 그렇게 덧씌워진 낡아빠진 진화론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서로를 살리면서 순환하며 공생할 수 있는 미래가 바로 눈 앞, 코 닿은 데 있는 것이다.

유기체란 그런 것이다. 내 몸에서, 내 가족에서, 내 마을에서, 내 지역에서, 내 나라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살게 하는 대자연의 지구별에서, 끊임없이 무게중심을 갖고 유기체로서 순환되도록 연대하면서 공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배하고 점령하며 수탈하고 억압하는 수직적인

확장이 아니라 끊임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며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수평적인 연대의 힘이다. 유기농이란 무엇인가? 자연에 귀의해 혼자서 자족하는 삶이 유기농인가? 어지럽고 복잡다단한 사회를 내치고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유기농인가? 사람에 시달려서 사람이 힘들어서 모든 인연을 끊고 자연과 더불어 농사지어 자급하며 그렇게 자족하며 살겠다는 것이 유기농인가? 아니면 유기농 인증 딱지 붙여가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독보적인 존재를 구가하며 선진 엘리트 농민이 되겠다는 것이 유기농인가? 아니면 그도 이도 아닌 이 시대에 돈이 되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에 편승해 하나의 방법적인 돈 되는 농사가 바로 유기농인가?

친환경이라는 말은 어정쩡한 말이다. 환경에 친하다는 말은 환경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친한 척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다. 과도기적 용어에 불과하다. 정말 우리가 유기농을 사유하고 성찰하려면 더 깊고 불온하게 근원의 본질까지 썰 새 없이 파고들어야 한다. 농(農)은 자연과 사람이 사는 사회를 이어주는 중요한 단어이다. 농이란 단어를 요즘에는 다 떼어내어 생명공학이다 바이오다 별 이름을 다 붙이고 난리들이지만 농이란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던가? 새벽의 노래이고 이 지구별의 노래 아니던가?

자연과 함께하는 이 노래는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다. 먹어야 살 것 아니던가? 먹어야 살고,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회를 만들지 않았던가? 여기에서 유기농은 자연을 끊임없이 수탈해가며 인간만이 사는 그런 제살깎아먹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자연과의 공존과 공생, 화해를 모색하는 이 지구별에 깃들여 사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인 것이다.

끊임없이 자연을 수탈하는 행위에 모든 권력과 자본들이 파리 떼처럼 달려들면서 난리굿을 벌이지 않았던가?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이 사회의 토대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던가? 사람이 자연에서 어렵게 취하는 고귀한 먹을거리에 유전자 조작을 해서 씨앗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여러 혼잡종으

로 만들어 끊임없이 팔아대며 갖은 농약과 비료와 사료 등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들을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속 빈 강정과 생명이 없는 허수아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자본이 하는 일 아니던가?

수입 농산물을 공장식으로 찍어내어 거기다가 또 화학첨가물을 잔뜩 덧대어 이미지만 화려한, 먹으면 병이 드는 가공식품을 만들어대는 것이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이 자행하는 짓 아니던가? 체제 권력들은 이를 용인하고 방기하며 이들과 결탁하여 영생불멸의 권력을 구가하려 하지 않는가?

유기농은 이런 엄혹한 시대에서 사회와 자연의 화해와 공존을 모색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런 유기농은 당연히 유기체에 의해 기반한다. 유기체는 거대한 지구별 자체가 소박한 생명의 그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심의, 수직의, 위계의 대장이 관할하고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터에서 생활권에서 무게 중심을 갖고 끊임없이 연대하면서 짜는 그물코의 생명 씨앗들이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국가와 자본의 자연과의 화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사회와 자연의 화해를 의미한다.

우리가 만드는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의 모일 사(社)는 흙 토(土)에 기반한다. 흙에 기반을 두고 인간들이 모여면서 만든 것이 바로 '사회'란 말이다. 이 사회의 기원은 바로 자연에 기반하고 있지 아니한가? 국가와 자본이 확연한 실체를 갖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사회는 너무 모호하고 애매하다.

국가는 이미 시스템화되어 면과 동사무소까지, 골목까지 권력을 행사하고 수렴청정하려고 위계질서를 짝 만들어놓았고, 자본은 이미 각 거점마다, 골목마다 편의점을 다 세워놓고 각종 프랜차이즈와 대리점으로 위계구조를 만들어놓았는데, 우리 사회의 실체란 무엇이란 말인가? 말로만 사회, 사회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의 실체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사회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얼굴을 맞대고 손을 맞잡아 이야기하며 다양하게 만나고 모여면서 그렇게 단단하게 다져내어 실체를 만

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항하기 위해 몸집을 무조건적으로 키우고, 수직적인 위계만 잔뜩 키워 힘겨루기를 할게 아니라, 점조직으로 게릴라성 폭우처럼 각각의 지역 거점에서 조그만 물방울 동심원을 만들어내어 같이 합쳐져야 한다. 그렇게 작은 동심원의 물방울들이 모여서 하나의 물결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물론 극악한 포식성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이 엄혹한 시대에 투쟁과 저항으로, 또 대결과 파괴로 그것들과 싸워야 하고, 또 거기에 힘을 보태야겠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삶터에서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창조하며, 만드는 것에 구심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결코 둘이 아닌 한 몸뚱아리가 되어 연결될 것이다.

다시 유기농으로 돌아가자. 유기농의 의미는 생태적 순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연만 딱 떼어서 자연 속의 독립된 사람으로 기능하겠다는 것은 사회를 아예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유기농의 의미에는 생태적 순환뿐만 아니라 사회적 순환도 담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순환이란 자연스럽게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사회에서의 순환을 의미한다. 이쯤에서 유기농의 사회적 순환은 로컬푸드와 만난다. 유기농의 생태적 순환은 토종과 전통을 존중하는 슬로푸드와 접점을 가진다. 로컬푸드는 자급의 의미와 그렇게 만나고 슬로푸드는 자연의 의미와 그렇게 맥을 같이 한다. 농촌이 단지 우수 농산물이든 친환경농산물이든 그 농산물의 생산기지가 되어서 도시의 농산물 공급 공장으로만 기능한다면 그것은 농촌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며 타자화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가족과 이웃, 마을, 지역의 먹을거리를 스스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단지 돈이 되는 농사를 좇으려 하고, 경쟁력 있는 농부를 키운다는 핑계로 대농만을 양산하여 강한 엘리트 농부만 키워내려 한다면 이는 또 그런 국가자본주의 문법에 충실하게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유기농을 더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역 생태의 순환과 지역 사회 순환의

접점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의 토대이고 순환경제의 중요한 구심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생태적 순환에만 매달려서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가 전혀없이 국가와 자본에 의해 형상화되고 구조화된 유기농만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사회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농약만 안 쓴다고 유기농이 아니다. 거대한 온실과 하우스를 짓고 석유농사로 대량생산을 하면서 특화하여 한 작물만 무더기로 심는 플랜테이션 공장식 체계를 가진 농업까지 농약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유기농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이라고 불린다면 우리의 생태계는 과연 온전할 것인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유기농의 사회적 순환은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유지시키면서 자연을 건강하게 만들고 자급하게 되면서 자치의 토대를 만든다. 유기농의 생태적 순환은 사회를 자연 속에서 더욱더 지속가능하게 만든다. 유기농의 함의는 자연과 자급과 자치, 그리고 연대의 그물망과 맥이 닿아있다. 지금의 유기농처럼 우리가 딱지장사를 해먹고, 자연과의 고립과 사회의 단절을 말하는 유기농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유기농은 아닐 것이다.

다시 이 암흑한 시대에 중산층 이상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유기농의 근원을 다시 생각한다. 상류층 가족들의 식탁에만 오르는 해외 유기농이 넘실대는 유기농을 생각한다.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유기농의 이미지를 벗겨내고 유기농의 근원과 본질에 대해 다시 성찰하고 사유한다. 유기체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부분이 없다. 모두가 소중하고 귀하다. 하나의 작은 가시가 박히더라도 온몸이 전율한다. 그 아픔을 공유한다.

우리는 과연 유기체로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탈주하고 끝도 없이 불온해져라. 고립이 아니라 독립을, 독립을 넘어 자립을, 자치와 자급의 연대망을, 순환과 공생의 연대망을, 생명과 평화의 연대망을 우리는 그렇게 지금 딛고 있는 삶터에서 짜야 할 것이다. 거대한 악과 싸우면서.

2. 옥천에서의 시작

옥천은 그랬다. 생태적인 운동이 사회적인 운동과 같은 몸뚱아리로 그렇게 자전과 공전으로 지역사회를 공글려 왔다. 지역의 농민운동이 사회운동과 생태운동을 포괄하며 지속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조금씩 구현해낸 것이다.

옥천의 농민운동은 1990년 옥천군 농민회가 창립되면서 시작됐다. 이즈음에 앞서 1989년 옥천 주민들은 지역 사회 운동의 하나로 옥천신문을 창립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꺼내놓고 지역사회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한편, 옥천군 농민회는 지역에서 전국 투쟁에 결합하면서 내실을 기하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지역 싸움에 결합하며 지역 내 토대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2000년대 초반 농민운동은 생태운동과 사회운동 두 개로 나뉘지만 이들 주체는 같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조직으로 건사하면서 나름의 토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먼저 지역사회운동부터 보면 다음과 같다. 옥천군 농민회는 홀로 움직이지 않고 지역의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여농(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기타 농민단체를 포괄하는 농민연대의 틀을 만들어 지난 2001년 쌀값 하락에 따른 투쟁의 하나로 지역의 농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자치단체에 제안하며 투쟁하였다. 군수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비롯해 군청 앞 천막투쟁까지 5년 동안 어렵게 군수가 두 번 바뀔 때까지 끈질기게 대화와 투쟁으로 농업발전위원회조례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농정민주주의의 상징인 농업발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결실을 맺었다.

지난 2003년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물결이 휘몰아칠 때 농민회는 전교조, 민예총, 사회보험노조, 환경노조, 공무원노조, 한농연, 흙살림과 함께 옥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를 만들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에 돌입했다. 2003년 12월 농민연대는 군과 군의회 및 농협 연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당시 시가행진 및 당일 집회에 이어 5일간 군청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때 당시 주요 요구안은 모두 6가지로 다음과 같다.

- 옥천군, 의회, 농협의 쌀 재협상과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입장을 밝힐 것
- 쌀값 안정을 위한 옥천군의 대책을 밝힐 것
- 지역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친환경 농업육성 및 학교급식조례개정과 관련한 옥천군의 계획을 밝힐 것
-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옥천군 농업예산의 목표치를 제시할 것
- 조합운영의 민주화와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협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 농정위원회(군, 농협, 농민단체)를 설치, 지역농업에 대한 전망을 수립할 것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사항이다. 세 번째 항목은 지역의 아이들 먹을거리와 지역의 생태농업에 대해 지역 사회운동화한 것이고 여섯 번째 항목은 지역의 농업문제를 농민들의 참여로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풀려 한 것이다. 이렇게 역시 투쟁과 대화를 통해 2006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 4년 만에 만들어진 것이다.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여기에서 중요하다. 지역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사회운동과 생태운동이 만나는 접점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학교급식을 토대로 지역의 자급운동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한다.

농민들은 2008년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 실행조직으로 옥천살림영농 조합법인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면서 자급의 거점의 구실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운동이 바로 옥천푸드 운동이다.

옥천푸드 운동의 시작은 2010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옥천군 농민연대에서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한 내용에 '지역 먹을거리 운동 활성화 등을 위한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했다. 옥천푸드는 주민 서명을 받으며 주민 발의를 통해 하다가 WTO조약 규정에 일부 조항이 위배된다고 조항을 빼고 다시 군수 발의로 지난한 대화를 통해 농민연대안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4년 만인 2013년 11월 20일 공포가 된 것이다.

옥천푸드지원조례가 공포된 11월 20일은 바로 옥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창립된 날이기도 하다. 옥천의 생태운동과 사회운동은 그렇게 접점을 만들어내며 한 몸뚱아리가 되고 있었다. 옥천의 생태농업운동의 시발은 2002년 8월 6일 옥천흙살림이 창립되면서부터이다. 옥천흙살림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옥천흙살림은 옥천살림영농조합법인을 만드는데 조직적으로 결합을 했고 이는 또 그렇게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만들어지는 작은 거름이 된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또 2005년 4월 8일 생태사회운동으로 대청호 주민연대의 창립은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농업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지역 자연이 만나는 접점에서 포괄하는 지역 생태사회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옥천은 생태 운동과 사회 운동이 따로 또 같이 결합하면서 일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왔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일어난 안내, 안남면의 생활권 자치 운동도 의미 있게 이런 틀거리 사이에서 지역의 망 속에 결합해 왔다. 농민회의 핵심 주체들은 이런 생태 사회 운동에 주도권을 놓지 않고 결합해 자연과 조화로운 지역사회 스스로 일어서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고자 매진해왔다. 이는 조직적인 결의보다는 자연스럽게 지역에 스며들어 각자 맡은 역할을 해오면서 갈라지고, 또 만나면서 그렇게 큰 물결의 흐름을 만들어온 것이다. 지금 옥천은 자급과 자치를 위해 지난한 진통 속에 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옥천푸드지원조례가 공포되고 옥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창립되고 옥천순환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지역 자급경제의 기반 토대를 구축하는데 자그마한 시발점이 되고 있지만 농협 관료 자본을 포함한 거대 자본들이 여전히 먹잇감을 포식하려 혀를 날름거리고 있고 체제도 이를 용

호하고 용인하면서 방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사회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열 찬 투쟁과 함께 우리의 토대를 단단히 구축해야 하는 것이 여전히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3. 옥천살림

2008년 세워진 옥천살림은 어느 날 갑자기 똑딱 혜성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별동별처럼 어디서 똑딱 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다. 오랜 20여 년 동안 숙성된 농민운동의 흐름선상에 존재한다. 국가권력에 착취당하고 자본권력에 수탈당해온 농민들이, 지역의 사회뿐 아니라 자연까지 더붙어 고민해온 농민들이 어렵게 마음과 돈을 모아 500만 원도 채 안 되는 자본금을 가지고 정말 백지장에서 그 백지장을 맞들면서 시작한 것이다. 그 흐름에는 농업발전위원회라는 농정민주주의운동이 있었고, 학교급식지원조례라는 지역의 미래와 자급을 생각하는 운동이 있었으며, 이를 탁상공론으로,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직접 옥천살림이라는 실행조직을 만들고 움직였던 것이다. 지역의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지역에 나는 친환경농산물이 모이는 거점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옥천살림의 철학은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로컬푸드이다. 여기서 순환은 생태적 순환과 자연적 순환을 모두 포괄하며 공생은 사회를 포함하는 모든 자연의 생명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옥천을 살리자는 옥천살림이고 옥천의 살림살이를 하겠다는 옥천살림인 것이다. 옥천살림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기보다는 지역 농민들의 주민들이 먹을거리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접점을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유통마진을 후려치며 살아남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주민으로서 같이 가격을 합의하며 그렇게 결정하여 유통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것은 없다. 교통하며 소통하는 그 속에서 그렇게 기능하는 것

이다. 옥천살림은 단순히 그 조직 형태로 영리조직이라 재단할 수 있겠으나 스스로 공공성을 지향하여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거리가 먼 소규모 학교도 똑같이 대등하게 농산물을 전해줬으며 지역의 모든 집집마다 두부 한 모라도, 계란 열 개라도, 쌀 한 봉지라도 배달을 해준다. 꾸러미도 수익을 남기려는 것보다는 지속가능하게 지역의 농산물을 같이 나누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먹을거리는 공공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있다. 옥천살림이 옥천 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구실을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몇몇 친환경농가만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친환경농업을 하는 모든 농가를 아울러서 그리 하려는 것이다. 지역 농업과 먹을거리가 그렇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옥천살림은 알고 있다. 그렇게 수익성을 강화하는 쪽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돈이 아닌 마음을 얻어내는 쪽으로 그렇게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다.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icoop](#)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이야기

때/곳: 2014년 5월 12일(월) / 대전역 동광장 진달래회의실

참석: 김근호(천안, 배 생산자)

임영택(홍성, 딸기·토마토 생산자)

주정산(홍성, 쌀 생산자)

홍진희(청주, 방울토마토·오이·고추·파·콩 등 생산자)

사회/정리: 이향숙((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사회자: 시작하기에 앞서, 한창 바쁘실 시기에도 시간을 내어 이렇게 와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생협평론>에서는 최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맹신 아니면 불신, 이렇게 양 극단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분들을 모시고 생산현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오늘의 좌담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자 생산하고 계신 작물과 생산 지역을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택 생산자(이하 임영택):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홍성 금마면에서 현재 시설하우스 위주로 재배하고 있고, 주 작물은 딸기와 토마토입니다. 시설은 3,000평 정도, 노지, 밭이 약 3,000평 정도 농사짓고 있습니다.

홍진희 생산자(이하 홍진희): 저는 청주에서 왔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로 농사를 하고 있고요. 농사작물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계획해서 농사하고 있는 작물은 방울토마토, 오이, 고추, 파, 상추, 얼갈이배추, 옥수수, 콩 종류입니다. 콩은 종류가 많아서 스무가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은 전체 2,000평 정도 되고요. 대부분 시설이었는데, 7할 정도를 벗겨내고 노지 농사를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설은 45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근호 생산자(이하 김근호): 저는 천안 성환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2,000평 짓고 있는데 저농약으로 농사를 짓다가 무농약 거쳐서 이렇게 된 게 지금 금년에 벌써 13년차 된 것 같습니다. 전량 다 생협에 납품하고 있는데 요즘에 농사가 잘 안됩니다.(웃음)

사회자: 소개 잘 들었습니다. 쌀 생산하시는 주정산 생산자분도 도착하는 대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지금 딸기, 토마토, 오이, 고추, 파, 배, 그리고 곧 오실 생산자분의 작물인 쌀 재배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농작물을 생산하는 분들이 모이신 것 같은데 우선 처음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임영택: 저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충남이 고향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쫓겨났어요. 농사지으면 못 먹고 산다고. 그래서 밖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무조건 집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사지는 지는 15년 정도 됩니다.

처음에 집에서 딸기 농사를 조그맣게 시작했었는데 제가 시설을 늘려서 농사를 짓게 된 건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큰 딸래미가 유치원생 때였어요. 이 녀석이 오자마자 하는 게 딸기를 따먹는 건데, 거기에 차마 약을 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흥동에 친환경을 하시는 지인들이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인증받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흥동 쪽에 물어갔으면 쉬웠을 텐데 그렇게 하질 못



임영택(홍성, 딸기·토마토 생산자)

했어요. 처음 인증기관에 연락을 했을 때, 그곳에서 자기들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증을 못 내주겠다고 해서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맨땅에 부딪치듯이 시작했거든요. 저는 무농약 인증받기까지가 최고로 힘들었습니다.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요. 인증 받고나서 홍성 유기농이 그때 막 시작할 때라 같이 참여하면서 유기농업으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홍진희: 저는 농사지은 지 20년이 조금 넘는데요. 1990년대 초에 학교를 마치고 바로 농사를 지으러 들어갔어요. 농사하던 중에 아버지 어머니 농사하시는 걸 거들다보니까 충격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농약을 워낙 많이 뿌리고 농사를 하고 있어서 놀랐죠. 거들어 드릴 때도 느끼긴 했지만 직접 농사를 지으러 가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등도 많고 그러던 중에 청주한살림 일하시는 분이 마침 찾아와 한살림 농사를 권하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주한살림, 그러니까 지역 한살림에 여러 물품들이 필요하다보니까 많은 농사일을 했던 것 같아요. 3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작물 농사를 하고 집에 먹을거리 심어놓은 것조차도 조금씩 담아서 내야 할 정도로 생산자가 열악한 상황이었지요. 집에 자급거리로 고추, 가지, 호박 심어놓은 것까지 따다 공급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유기농업이다, 친환경농업이다라는 규정이 나 제도가 아직 마련되기 전이었거든요. 인증제도도 없었으니까 막연하게 독한 농약을 쓰면 안 된다, 비료는 가급적 안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농사를

10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2000년 전후로 인증제도가 생겼는데 그때 품질표시신고부터 시작해서 유기인증까지 2~3년 정도 시간 거쳐서 인증 받고, 유기인증으로 10년 이상 농사하고 있습니다.

김근호: 저는 농사짓는 걸 거들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취직 고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농업을 하게 됐죠. 처음엔 면적이 작아서 임대로 면적을 늘려서 대규모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15년 가까이 엄청나게 농약에 절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나 합성물질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더라고요. 그동안 돈은 벌었는데 농약이 싫어서 포기해야 하나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해봤죠. 그때 당시에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식물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농약을 줄이는 연습과정을 힘들게 거쳐 무농약에 뛰어들었는데 생각지 못한 여러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무농약을 시작하고 5년간 한 톨도 건지지 못 했습니다. 배나무는 봄에 꽃이 피는데 가을에 꽃이 또 피었죠. 그렇게 두 번씩 꽃이 피서 5년이 지나고. 꽃이 필 때부터 병이 생기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농사가 안된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유량을 많이 다녔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터득한 게 있습니다. 한국 역사가 5천 년인데 농약, 비료가 나온 건 50년이 채 안 돼요. 나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농약, 비료 없이 농사를 다 지었는데. 아



홍진희(청주, 방울토마토·오이·고추·파·콩 등 생산자)



김근호(천안, 배 생산자)

니 그럼 4,950년 동안에는 유기농만 먹고 살았는데 불과 농약비료 몇 년 먹고 돌아가려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품종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농약 없이 잘 자라던 50년 전 재래식품종을 하면 지금과 입맛이 달라서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품종 중에도 병해충에 강하고 맛있는 게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접목해서 다시 바꾸는 중입니다.

사회자: 고생이 정말 많으셨겠는데요. 친환경농산물을 하시게 된 계기에서부터 어려움, 성과까지 말씀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임영택 생산자님은 처음에 딸기 농사지으시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임영택: 저는 그때 당시 육보¹였어요. 그게 흰가루병엔 굉장히 약한데, 저희 동네에선 그 당시 하우스 딸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 농사지으면 잘 모르잖아요? 같은 농사짓는 동네 어른들한테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배워야 하는데 저는 동네에서 배우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아저씨들이 무슨 약을 쳤는지는 얘기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밖에서 많이 듣고 배우고 했습니다.

아산, 예산으로 한 1년 정도 거기 짧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약을 치지 않고 병해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번엔 이만큼 잡았으니까, 다음번엔 이 방법을 써보고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해가면서 넓혀갔어요. 정말 힘들 때는 금액으로 따지니까 3,500만 원 어치 딸기를 땅에 묻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술이 없었죠. 그런데 단순히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라 돌이켜보니까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설향이라는 품종으로 바뀌면서 노지 재배가 안 돼요. 종 자체가 하우스 전용으로 나오는 거고 노지에서는 탄저병이 워낙 심해서 힘들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만드는데 먹이사슬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도록 하려면 지속적으로 무언가가 자라줘야

¹ 일본 에히메현(愛媛縣)에서 아이베리 품종에 도요노카 품종을 교배해 얻은 딸기 품종으로, 열매가 크고 맛과 향이 좋다. 레드필이라고도 하며 1998년에 한국에 공식적으로 도입했다.(사회자 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만 주면 풀이 잘 자라는데 그 풀이 어디에서 씨앗을 사왔는지까지도 요즘은 밝혀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씨앗을 사다가 제 밭에 뿌려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수단을 갖다가 심기도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풀의 종류가 많아요. 시기별로 풀이 달라지죠. 노지에서는 자연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는 그 영향을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고 심지어 내버려둬도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충청남도기술원에서 심사가 왔었는데 풀을 심은 근거를 대라고 하더라고요. 종자를 구입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그런데 자료 모아온 것을 보여주니까 인정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사실상 저는 무농약에서 유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농약보다는 비료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쉬웠거든요. 무농약에서 유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저도 100% 성공한다는 건 자신 못하고 특히 딸기나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본포에 정식했을 때, 거기서부터는 사실상 95% 이상 살릴 자신이 있어요. 문제는 여름에 육묘기간이 고온다습한 상황에 병해충이 굉장히 많은 상태일 때, 이 상황에서 저는 성공률을 50%로 두고 시작해요. 제가 만약 10만 주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20만 주를 생산할 계획으로 많이 심습니다. 그러면 50%는 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80%는 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반만 얻을 것이라고 하면 자연은 항상 반보다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홍진희: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까 품종 말씀하셨는데, 저는 종자 문제를 2000년 무렵에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해서 농사하는 작물들과 씨앗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가 키울 수 있는 것 위주로 해보자 해서 재래종자, 토종 종자 쪽으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품종문제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유기농하면서 자재도 그렇지만 씨앗을 제대로 심지 못하면 유기농업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문제가 결국 농사 방

식하고 연결돼서 토종 종자로 농사를 하니까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춰도 농사가 잘 안되는데 제철, 제 기온에는 작물들이 아주 잘 자라고 제철에 심어놓으니까 병해충도 자연천적, 자연의 힘만으로도 많이 억제가 되더라고요. 토종작물을 제철에 심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비용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유기농업을 해나가는 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모두 연구자분들이시네요. 조금만 들어봐도 농사를 지으시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업을 끝까지 하시게 된 원동력이랄까요? 힘,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김근호: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왕따를 시키고 밥도 술도 안 먹으니 오기가 생겨서 더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사회에서 어느 순간 외톨이가 돼서 말 그대로 떠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결국은 성공한 모습을 보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또 유기농업을 오랜 시간 하다보니까 열매가 달리는 걸 지 스스로 조절한다는 것에 제가 메리트를 느꼈어요. 건강한 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거지, 시원찮은 나무에는 절대 안 달려요. 불필요한 투입비용이 엄청났었는데 지금은 내버려둬도 그런 부분이 조절이 돼서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덜 들어가요. 달리는 열매가 부실할지언정 일단 유기농 배가 없다 보니까 저농약 대비해서 가격이 두, 세 배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배농사를 짓는 사람이 3만 8천 농가예요. 그중에서 유기를 하는 사람이 38명이면 0.1%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가서 이제 스무 명 정도 남나 봐요. 그럼 이게 본업이 아니고 논농사나 축산을 한다면 지 해서 또 열댓 명 이상이 떨어져 나가면 여기서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섯 명 정도 되는 거니까 그만큼 희소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농약이 참 독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 농약보다 더 잘 듣는 천연 물질이 많아요. 응에 같은 경우는 농약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었어도 내성이 빨리 생겨서 농약 수명이 짧아요. 일반 식용유, 유화제를 조금 주면 그 농약보다도 엄청나게 파괴력이 세요. 앞으로 기회가 닿아 좌담회나 기술교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 수집하고 교환이 된다면 농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주정산 생산자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조금 늦게 오셨는데요. 재배하는 품종이야기, 처음 친환경농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과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정산 생산자(이하, 주정산): 길을 잘못 들어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풀무학교를 통해서 농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역에 정착하면서 환경농업을 알게 되었고 농사를 쭉 짓다 보니까 농업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됐고요. 주 품목은 쌀 농업입니다. 면적은 8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농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착하는 젊은 층은 없고 노인 분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27년 전에 정착했을 때 있던 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70, 80대시고 언제까지 농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농업은 좀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이 절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친환경농산물들에 대해 가격이 비싸다고 표현합니다. 불과 2, 3년 전 급식이 시작되기 전 만 해도 마치 상위층들이 친환경 농산



물을 먹는 듯한 느낌을 주었는데 서민들도 누구나 쉽게 친환경농업을 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고비용보단 저비용으로 되어야 확대될 수 있거든요. 소비가 확대되지 않으면 농업이 확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의 공동체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서 하는 것은 절대로 친환경이 될 수 없거든요. 특히 논농업에서는 마을단위 전체가 같이 가야 하는데 80살 노인들이 90살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결국 젊은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사회자: 예,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을 하시게 된 계기부터 지금 처한 문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친환경농업이 처한 문제는 처음 유기농을 시작하던 단계와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영택: 저는 처음에 친환경으로 농사를 시작하고 나서 포기하고 싶던 적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 때문이에요.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아이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여태 시골에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것, 친환경농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한 건 우리 애들밖에 없었다는 걸 듣고 굉장히 몽클하면서 이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녀석들이 커서 둘째 아들 녀석은 농사를 짓겠대요(웃음). 그래서 얼마 전 풀무학교를 보냈습니다.

시설작물 중에 특히나 딸기는 희소가치가 없고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방송사 다큐 때문인지 “딸기는 유기가 불가능하다던데 당신은 어떻게 재배를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욕심이라고 제가 답변을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만 주를 얻기 위해 20만 주를 심습니다. 조금 무식한 방법이지만, 제가 100% 얻을 수 있

는 실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그렇게 재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당장 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 내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도 전문성 있는 집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 생산자들끼리 연락해서 친목 도모 형식으로 만나 교류를 할 수 있지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예를 들어 생협에 아이쿱, 두레, 한살림이 있잖아요. 생협에서 생산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처한 유기농업의 어려움, 잘못된 인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모아진다면 더 큰 배울 점과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진희: 제가 속해있는 지역은 도시 변두리 시설채소 전문 생산단지라서 지역 생산자들끼리만 모이면 얻기 힘든, 소통하기 힘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하우스를 벗겨내고 노지 쪽으로 가고 토종작물농사를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느 지역이나 대부분 흐름이 조금 더 효율을 높이고 수확량 위주로 농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서 고립되고 소통할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게 근본적인 유기농업을 지향한다고 하면 어디서나 누구나 겪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주정산님 말씀도 그랬지만 지금의 흐름대로 유기농업이 간다고 할 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려고 할까. 물량이나 효율성 위주의, 수익 위주인 농사로 움직여갈 때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할까. 여기서 행복을 찾아가려고 할까에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예전 선조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해온 농사 중에 정말 지혜롭던 부분을 우리가 효율성이나 물량 위주의 농사로 가면서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걸 극복하는 게 땅도 농작물도 건드리지 않고 자연도 잘 살피서 그 안에 잘 몰랐었던 자연 속의 원리나 작은 생명체들, 자연 천적 체계를 알려 나가고 아

이들에게 접하게 하고 그런 게 관심을 갖게 만들고 참여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 건드리고 많은 친환경 자재를 뿌리고 하다가 논생물 다양성 논농사라는 것을 몇 년 전에 접했는데 토종 작물과 그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가려져 있었던 유기농업이든 자연농업이든 덮개처럼 덮여져있던 게 조금씩 열리고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농사에 애정을 갖고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자: 유기농의 결과물뿐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소비자,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가 있을지 고민하시는 것도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과 작물, 지역이 다 달라서 가지고 계시는 고민과 당면한 과제도 다르실 것 같은데요. 방금 친환경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교육적으로나 어린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농업을 고민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지역 속에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안도 좋습니다.

김근호: 과수나 과채류 쪽에 현 시스템에서는 첫 번째 자재 개선이 우선일 겁니다. 농약을 대신할 자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사다가 의존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재를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려고 하면 또 시설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집에 있는 시설이 2억이 넘어요. 그런데 2억이라고 하는 돈 중에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5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다 협동으로 해낸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가마를 만드는데 우리 이장님이 3일 동안 쌓는 걸 기부했어요. 뜻에 맞는 사람들이 공동출자해서 설비를 갖추고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와서 자재를 나눠가는 거죠. 이제 이걸 10년 쓰다 보니까 시설이 낡았어요. 분명한 것은 저는 이걸 운영해서 1원 한 장 번 게 없어요. 왜냐면 싸게 팔았기 때문에. 이걸 사간 사람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걸 2억을 다시 투자해서 하기에 다들 힘들어하는 시점에 와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서는 분야별로 여러 사람의 노하우를 끄집어내서 이것을 표본화해야하고 자재를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에 줘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트워킹이나 노하우를 통한 밀집된 자재생산이 필요하다, 그게 친환경 농업에서의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신 것이죠?

김근호: 네. 생산 쪽에선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소비자에게는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소비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만약 소비자들을 데려와 보여주자고 해도 버스는 너무 멀어서 걸어와야 하고 승용차는 주차장이 포화될 거고. 화장실은 또 몇 개를 준비해야 하는가 걱정이예요. 생산은 생산대로 믿을만한 자재를 절반 가격에 갖다 쓸 수 있다면 생산에만 전념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건 어느 품목이 되든, 어느 생산자 단체가 되든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자: 풀무생협 쪽에서는 지역에서의 친환경 확대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정산: 농민분들은 하나같이 다 사업자고 경영자다 보니까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같은 경험을 해왔고 본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줄 알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친환경농업에선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마을로 보자면 시작한 지 15~16년 정도 됩니다. 단순히 누구 한 사람이 “친환경농업을 하세요” 해도 절대 사람들이 쫓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미친놈, 말도 안 돼”라는 소릴 듣고요. 판매가 될 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만 판매가 안 될 적에는 다시 원망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희 마을은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라 논이 500마지기 정도 돼요. 그중에 450마지기 정도가 유기까지 올라가 있고 15~20년 전에 최초로 시작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논 한 마지기가 450마지기가 된 거거든

요. 그런 걸 보면, 농업은 결코 누군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뭘 하라고 할 것 없이 꾸준히 보여주는 겁니다. 전부 다 올해 소식재배를 시작했고요. 먼저 보여주니까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을 전체가 유기농업을 하고 있고, 소들도 먹이고 있고요. 먼저 소를 먹이면서 좋아진 게 뭐냐면, 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시 논으로 쓰이고, 다시 논에서 나오는 것들로 소를 먹이고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후계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5년 전에 동네 마을 이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최고 어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밑의 후배들이 관행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후배들한테 취지를 물어봤어요. 그 친구들은 아버지가 불렀다는 거예요. “야, 우리 마을에서 농사지어서 부자가 됐는데, 너도 들어와서 농사지면 부자가 될 수 있어”라고 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착할 때 왜 농사를 짓느냐는 소리가 이제는 농사지으란 소리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협업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면요. 옛날에는 노인분들이 지금으로 얘기 하면 모 자리를 만들기 위해 저한테 찾아왔어요. 불과 6~7년 전만 해도 이앙기, 트랙터를 빌리러 남의 마을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을 전체적으로 일을 젊은층들이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인 분은 단순히 논에 풀 깔고 물 높이만 조정해주면 벼가 생산이 되고 또 가을이 되면 그것이 추수가 돼서 도정해서 소비자들한테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주정산(홍성, 쌀 생산자)

농업은 농민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소비자의 몫이 큼니다. 소비 없는 생산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소비 없는 생산은 결국 농업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생산을 많이 했는데 팔 곳이 없다는 것은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홍성지역에서 한 때는 800여 농가가 되었던 친환경 농가들이 지금은 500여 농가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게 소비가 잘 이루어졌더라면, 홍성지역만큼은 엄청나게 큰 확대가 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어느 지역에 가보든지 적게는 70%, 많게는 90%까지 지도자의 역할에 의해서 쫓아오는 체계거든요. 지도자의 역할은 재배도 아니고 생산도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판로예요. 현재 친환경에서 고비용으로 들어가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그렇다고 생산자들한테 계속 싸게만 만들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는 또 비싸게만 먹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야 결국 소비와 생산이 가능해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 무조건 확대보다는 판매를 고려한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오늘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그 과정, 그리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애쓰시는 생산자분들의 진솔한 말씀들을 들어봤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역할, 소비자의 역할, 그 사이에서의 소통. 그리고 중간다리의 역할인 생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잘 돌아갈 때 비로소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리라 생각해봅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들을 밑바탕으로, 앞으로 친환경농업시장이 더욱 내실있게 다져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coop](#)



- 이슈 ▪ 규제 완화라는 재앙, 그리고 의료민영화
- 저성장시대의 주택정책의 방향과
공유주택의 역할

규제 완화라는 재앙, 그리고 의료민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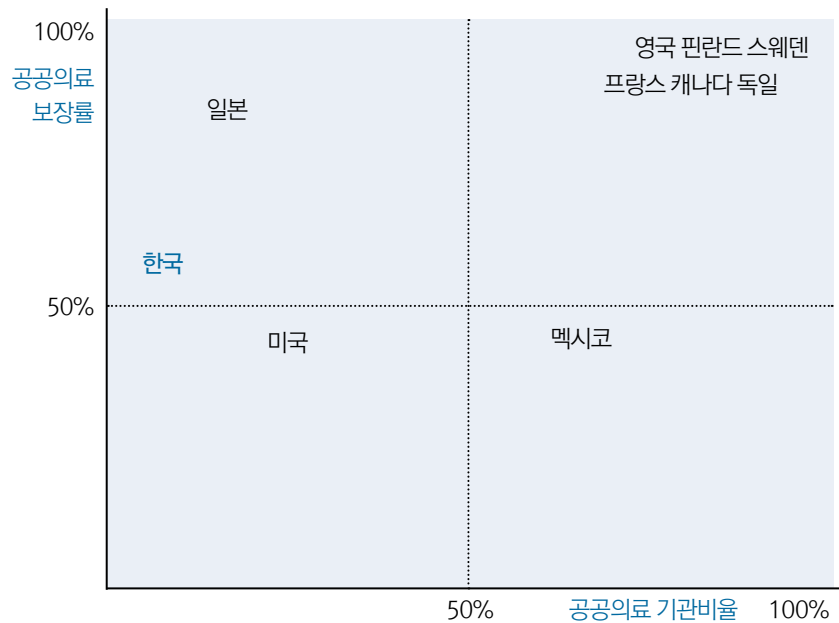
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한 나라의 의료 공공성 수준을 설명하는 데 기본이 되는 두 개의 기준이 있다. 하나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보험(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가 소유 및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이다. 이 기준에 견주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 수준은 몇 점이나 될까?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은 절반을 겨우 넘어 55% 수준이다.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다. 이 비급여 진료비는 가격통제가 되지 않아 병원마다 부르는게 값이다. OECD 34개 국가 평균이 75%인 것을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의료가 완전히 민영화된 미국, 칠레, 멕시코에 이어 최하위권에 속한다. 또 다른 축,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어떨까? 이건 더 처참하다. 34개 국가 중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6%로 꼴찌다. 최근 7%였던 공공의료기관이 진주의료원 등의 폐쇄로 그나마 더 떨어져 6%가 됐다. 다른 OECD 국가의 예를 보면,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병원이 70%가 넘는다. 대부분이 공공병원이고 의사들은 공무원이거나 준 공무원이다.

우리가 의료 공공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일단 이 두 개의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과 공공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준 말이다. 아래 표는 우리나라의 의료가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해 두 가지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오른쪽 위를 향해 가는 것은 의료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의료공공성이 붕괴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것을 ‘의료 민영화’라고 부른다.



<한국의료의 상황: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보장률의 국가 간 비교>

‘복지국가’란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보험 보장성이 매우 높아 병원비 걱정 없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 혹은 아예 국가가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나라다. 한 마디로 의료공공성이 매우 높은 나라를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오른쪽 위를 따라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왼쪽 아래를 향해 급속히 떨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 방향으로 계속 가다간, 어쩌면 저 표 바깥 아래로 떨어져 바닥 어딘가로 침몰할 지도 모른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바로 저 아래로 내려가는 침몰의 방향이고, 그 방향키를 조준하는 역할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임했다.

‘규제 완화’라는 이름의 민영화

다 잊혀진 약속이고 이젠 민망할 정도가 되어버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의 당선 공약은 ‘복지와 민생’이었다.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는 없다’고 했고 공공성을 뿌리째 흔드는 민영화가 아니라 복지를 약속했다. 독재자였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한국을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만하게 만들었다는 ‘민생’이 그녀를 대통령으로 만든 가장 큰 무기였다. 그러나 2014년 봄, 그녀가 대통령이 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민생과 복지는 온데 간데없고 사람들은 무너져서, 침몰해서, 삶의 터전을 빼앗겨서, 그렇게 깔려서, 익사해서, 가만히 죽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들의 민생과 복지를 침몰시키는 방법은 바로 ‘규제 완화’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그녀가 공식적으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국정 수행의 가장 큰 목표는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는 최악이고 암 덩어리이므로, 이를 제거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었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정리하자면 “규제는 우리가 쳐부수어야 할 원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온 국민을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한 세월호 참사는 바로 그 ‘규제를 쳐부수어서’ 생긴 재앙이다. 정부는 어떻게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규제 완화가 만든 참사이고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구조작업조차 민영화한 규제 완화 정책이 낳은 끔찍한 결과다.

세월호는 청해진해운이 2012년 18년 된 일본 퇴역 여객선을 도입하고 개조하여 만든 배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해운법 시행규칙을 ‘규제 완화’하여 20년까지 쓸 수 있던 여객선을 30년까지 쓰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2년 개정된 수난구호법이 ‘민관협력’이라면서 구조작업을 민간기업에 맡겼기 때문에 해경은 제대로 된 구조조치 하지 않았다. 구조작업조차 민영화한 것이 해경의 무능을 낳은 것이다. 심지어 수난구호법은 정부의 책임을 완전히 기업에 양도하여 그 구조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까지 하고 있다. 생명 구조작업까지 민영화한 한국정부와 기업의 유착과 부패가 이번 참사를 만든 근본 원인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런 대형 참사 앞에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한 규제 완화와 민영화에 대한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한 민영화 정책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에 투자해 돈을 벌고 싶은 투자자(그냥 부자와 재벌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원스톱 서비스란,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투자자를 위해 사회보장제도로 보호되어 있는 의료에 대한 공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원스톱으로 말이다.

갑상선암 수술 10배의 나라

한국 의료비 증가 속도는 세계 1위다. 한 해에 국민들이 의료비로 내는 돈은 약 100조다. 엄청난 돈이다. 이렇게 급증하는 의료비 때문에 재벌과 부자들은 의료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는 바로 이런 재벌과 부자들에게 의료를 투자처로 내주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바대로 재벌과 부자들에게 의료를 투자처로 내주려면 한국 의료비를 공공제도로 떠받치고 있는 몇 가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우선 비영리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은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6%밖에 안 된다. 결국 94%가 민간의료기관이라는 말이다. 이런 민간의료기관들은 제대로 된 규제가 없어 더욱 영리화되었고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를 늘려 돈을 벌어 왔다. 병원을 지으면 곧 고수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돈벌이 경쟁은 극심해졌다. 대도시 집중으로 대형병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고 비급여 진료 경쟁은 최소한의 의료윤리를 붕괴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갑상선암 수술률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 OECD 국가들 평균보다 한국의 갑상선암 수술 건수는 10배가 넘는다. 일본에 비해서는 20배가 넘는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수술률은 결국 비급여 진료로, 환자의 등골을 뺏먹는 방법으로 자행된다. 이는 하지 않아도 될 초음파 검사와 조직검사, 그리고 수술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민간의료 중심 체계가 만든 결과다.

이렇게 영리화가 심화된 의료를 그나마 규제하고 있는 것이 '비영리법인' 제도이다. 이것은 모든 병의원 의료기관이 병원에서 번 돈을 병원에만 쓰도록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비영리병원 규제를 완화해 투자자들이 병원에 돈을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고, 주식에 상장할 수 있는 영리 자회사를 갖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로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조치다. 게다가 병원들의 부대사업 범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병원들은 '진료 외 수익'으로도 돈을 번다. 병원 안에 있는 장례식장, 주차장, 커피숍, 편의점 등이 진료 외 수익에 속하고 병원 부대사업에 해당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병원 부대사업은 '환자들과 병원 종사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규제되었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해야만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었기에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선택적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병원협회가 바라던 바, 부대사업 범위는 의료기관임대, 의료용품, 의료기기, 의약품개발 등 환자 치료와 직결된 범위까지 가능해지고, 심지어 화장품, 온천장, 목욕장, 건강식품 및 건강보조식품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그야말로 의료종합 멀티플렉스의 탄생이자, 환자 건강을 담보로 한 문어발식 백화점을 허용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조치들은 병원을 통한 재벌기업을 만드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는 병원비를 급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환자 치료와 직결된 분야까지 병원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렇게 규제가 풀린 부대사업들은 모두 병원의 영리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비영리법인 병원'이라는 공적 규제를 건드리

지 않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것도 ‘규제 완화’라는 꼼수를 통해서 말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담당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변명이다. 복지부는 병원들이 앞으로 영리자회사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환자들에 대한 과잉검사와 처방은 덜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방침을 홍보한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복지부의 설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원 자회사들의 수익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환자 치료와 직결된 의료용품과 의료기기, 그리고 의약품 회사들이 수익을 낸다는 것은 환자들이 치료로 부담하는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게 병원 자회사의 수익이다. 도대체 복지부는 어떤 산수를 배웠길래 병원 자회사의 수익이 환자들의 과잉진료를 줄이고 의료비 증가를 막는다는 셈법이 가능한 것일까.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의료기관 임대업을 병원 자회사로 허용하겠다고 한 것과 별도로 의료기관 인수합병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허용은 병원협회가 수십 년 동안 요구했던 숙원사업이다. 구조조정이 편리해지고, 병원이 기업처럼 가격이 매겨지면 매각을 통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허용은 병원이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과 이윤량에 따라 사고 팔리는 상품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러한 조치는 ‘삼성이나 아산(현대)병원’과 같은 재벌병원들이 동네의원들을 소유하거나 체인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 민간보험회사에서도 떼돈을 버는 이런 재벌병원들은 동네의원을 줄 세우기할 수 있고 네트워크형 병원을 통해 자회사의 민간의료보험을 더 많이 팔게 할 수 있다. 자회사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우대하는 방법으로 ‘민간보험 줄 세우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가 기존 방법과 다른 점은 법 개정도 없이,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행정 독재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정부의 규제가 미비했거나 규제가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았던 곳을 찾아 민영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방법이다. 국회도 거치지 않고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기 때문에 행정 독재를 통한 민영화라고 부를 수 있다.

정부는 규제를 제거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선전하지만 규제 완화는 민영화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의료비를 얼마나 상승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우리나라 의료는 민영화되었고, 건강보험당연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기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정부는 말한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역할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96%의 민간에게 내맡겨 놓은 의료 때문에 한국은 의료비 증가율이 세계 1위고, 증가하는 의료비를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으면서도, 이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니. 이게 도대체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할 이야기인가. 게다가 이런 영리화된 의료공급에 대해서 통제가 아니라 더욱 무규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민영화로 가겠다고도 도대체 제정신인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민영화가 종합 패키지로 추진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으로 인해 급상승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며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축소할 것이고,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내도 보장성이 줄어드니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불만을 정부가 만들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은 병의원·약국이 건강보험 환자들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강보험당연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삼성생

명 보고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진행 방향을 예고해 왔다. 결국 의료영리화와 의료민영화조치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안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선택제를 허용하는 조치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정들은 올해 의료민영화를 막지 못하면, 내년 신년기자회견 때 우리는 당연지정제에 대한 규제 완화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이 대안

안전성과 비용대비 효과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도 문제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들, 그리고 도서 산간 지역 주민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치료에 대한 안정성이 제대로 입증된 바 없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직접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고 진찰받는 게 아니라 컴퓨터 단말기에 의지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의료에 대한 물이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의료 소외계층 운운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IT 재벌기업과 의료기기회사들이 떼돈을 벌게하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도서 산간지역 주민들이나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에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컴퓨터 단말기를 통한 안전치 못한 원격의료는 아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게 해달라면서 기업들이 사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면 더더욱 원격의료는 금지해야 한다. 기업들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면 ‘국민 개인생체·질병 정보의 집적과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국민 개인질병정보는 매우 예민하고 은밀한 개인정보로 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만 관리되고 보호되어 왔다. 그런데 원격의료를 빌미로 기업들이 이런 소중한 정보에 대한 공적 규제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개인질병정보와 생체정보가 인터넷 망을 통해 기업들에게 집적되고 유출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제도다. 결국 삼성, LG, KT, SK 등과 같은 IT 재벌기업들은 원격의료를 통해 떼돈을 벌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안전사고의 증가와 개인질병정보의 유출일 것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급한 상황에서 원격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의료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도서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재난대비체계나 응급의료체계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하지만 규제 완화가 불러온 이런 대형 참사 앞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정부는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참사 속에서도 여전히 기업주들의 편에 서서 규제 완화는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4월 중순, 원래 예정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죽었다. 한꺼번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면서 그렇게 죽어갔다. 그리고 그 죽음은 대통령을 멈춰 세웠다. 잔인하지만 슬픈 진실은, 대통령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건 아이들의 목숨이라는 것이다. 이제 아이들이 잠시 멈춰 세운 의료민영화를 우리가 나서서 완전히 멈춰 세워야 한다. 더 많은 생명들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 나서야 한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생명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가치가 요즘처럼 절실하게 다가올 때가 또 있었던가. 우리는 이제 더 많은 공공 규제와 통제를 통해 의료를 공공화하고 모든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제대로 된 정부가 되라고. 부자와 재벌을 위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가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이다. [icoop](#)

저성장시대의 주택정책의 방향과 공유주택의 역할

변창흠(세종대학교 교수)

이제는 불가능해진 과도성장의 흔적들

2014 지방선거가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규모 개발사업 공약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끄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후보조차도 용산국제업무지구나 뉴타운사업처럼 그동안 미진했던 기존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데 그칠 뿐 새롭게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자는 주장은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 ‘뉴타운돌이’로 유명한 2008년 총선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공약이 마지막 불꽃을 피운 이후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 등에서 더 이상 개발사업이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도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는 기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발표되었던 수많은 개발사업이 실제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마저도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서울에서 추진구상이 발표되었던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만도 중구, 상암, 잠실롯데, 종합운동장, 삼성역, 독섬, 용산 등 7개나 되었지만, 그 중 제2잠실롯데월드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서울에서는 25군데의 뉴타운 사업과 1,160곳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많은 사업들이 사실상 추진이 중단되거나 구역 자체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눈을 전국 차원으로 돌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그나마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지방에서는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공공기관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한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몇 년 전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개발지구로 지정된 면적만도 전 국토면적의 1.2배에 이르고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비용만도 712조에 이른다. 전국에서 건설 중인 신도시만도 10개의 혁신도시, 6개의 기업도시, 8개의 경제자유구역 내 30여 개의 개발지구, 20여 개의 수도권 2기 신도시와 지방 주택 신도시, 2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충남과 경북의 도청 신도시, 세종시까지 70여 개에 이른다. 경제가 활황기라해도 이렇게 많은 개발사업의 수요가 존재하기 어렵고, 그렇기에 성공하기 어려울 텐데 성장이 정체된 현시점에서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주택정책의 결과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그런데 주택시장의 불안정은 대부분 주택가격의 급등을 막는 일이었고, 그동안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은 주택의 공급 부족에 있다고 보았다. IMF 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때는 주택가격의 급락을 막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정책이었지만, 이때조차도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포기되지 않았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금융위기가 극복되고 난 후에는 또다시 주택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대부분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찍부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이란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였다. 주택을 대량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촉진법이란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토지개발공사를 설립하였다. 이 법을 이용하여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정부는 1989년 분당, 일산, 산본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과 주택공급 200만 호 구상을 발표하게 되었다. 신도시를 대규모로 건설하여 개발이익의 규모를 키우고 이를 활

용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신도시 건설방식은 그때 이후부터 최근까지 팽창시대에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되어 왔다.

대규모 택지의 개발, 건설업체들에 저렴한 택지의 분양,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수요 촉진 정책으로써 주택의 선분양제도 등은 개발과 성장시대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해결책이었다. 여기에는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이 건설자금과 수요자의 주택매입자금으로 활용되었고, 건설자금과 자가주택 자금의 대출을 위해 세제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활용되었다.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양적인 측면에서는 주택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었다. 주택보급률은 2012년 기준으로 102.7%에 이르게 되었으며 수도권도 99.0%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2000년 249호에서 2010년 302호로 증가하였다. 가구당 주거면적이 2000년 62.4㎡에서 2010년 67.4㎡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 25㎡로 증가하였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도 2006년 전체 가구의 16.6%인 268만 가구에서 2012년 전체 가구의 7.2%인 128만 가구로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2013,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

그러나 여전히 주거복지를 위한 물리적, 제도적 기반은 취약하고 주거 안정성은 거의 개선되지 못했다. 주택보급률이 늘어나고 주거 면적이 늘어났지만, 자가 주택 점유율은 2005년 55.6%에서 2010년 54.2%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세입자 중 월세가구의 비중도 1995년 14.5%에서 2010년 21.5%로 증가하였다. 주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평균 거주 기간은 2006년 7.7년에서 2012년 8.6년으로 소폭으로 늘어났으며 최초주택마련 평균 소요 연수는 8~10년으로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인 PIR은 전국 기준 4.9배, 수도권 기준 9.0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인 RIR은 19.2%이고 수도권의 경우 20%를 상회하고 있다(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결과).

주거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재고의 5.0%에 불과하여 프랑스 19%, 영국 17.5%, 스웨덴 17.0%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일본 수준(6.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세입자들의 연속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주거급여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시행 중이라 주거복지대책은 아주 취약한 상황이다.

주거 불안정 증대라는 새로운 주택문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의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고, 전국에서 미분양 되고 있는 주택, 아직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었지만 미분양 된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되고 개발되지 않은 지구, 전국의 뉴타운 지구, 정비사업 지구, 각종 신도시와 개별 개발지구 등이 대기 중에 있다. 더 이상 급격한 경제성장도, 급격한 수요 증가도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주택가격 급등을 이끌었던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하락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컸다. 반면, 그동안 하락세에 있었던 지방 대도시에서는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의 규모면에서도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였던 중대형 평형의 주택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소형 주택은 하락세가 적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3월을 기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전셋값은 전국에 걸쳐 전 평형, 전 주택유형에 걸쳐 상승하고 있다. 전세 주택이 전세를 낀 월세 주택이나 순수 월세 주택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주택의 매매가격 수준에 근접하거나 심한 경우, 아예 이

를 넘어서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가구들이 정부의 자가주택촉진정책을 이용하여 어쩔 수 없이 주택을 구입했지만, 가계부채 급증으로 하우스 푸어가 되고 있다.

주거 불안정 현상은 정비사업지구에서도 뚜렷이 관찰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열풍처럼 확대되었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나 뉴타운 사업들이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면서 주거의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재정비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기도 어렵고 계속 추진하기도 어려워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기존의 정비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비사업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긴 불안정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일시적이거나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과거의 주택공급 부족의 시기를 지나 주택시장이 정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주택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에 적용했던 주택정책을 주택시장 환경이 완전히 변화한 현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만 유발할 수 있다. 더구나 미래의 주택정책은 과거의 정책 틀을 넘어 주택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 정책

주택시장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주택문제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은 여전히 주택시장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09년 3월 전세가격이 급등한 이후 이명박 정부는 전셋값 급등의 원인을 주택시장 침체에서 찾았다.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하면서 주택구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어 전셋값이

급등한다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정부의 전·월세대책의 방향은 매매시장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정해지게 되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위한 금융정책에서부터 다주택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 등이 전세대책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확실한 전세대책이라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임대료 인상을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내팽개친 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제도, 공유형모기지제도, 취득세 영구감면 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을 밀어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014년에 들어서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더욱 치중하게 되었다. 청와대가 투자활성화 대책과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국정 의화로 설정함에 따라 부동산정책에서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건설업체나 부동산 업계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나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장애요소로 지목한 규제들을 규제개혁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성격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수익성을 고려하여 중대형 주택을 확대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서민용 주택공급을 위해 소형주택의 공급을 의무화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서 정부는 끝내 중대형 주택의 확대를 통한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손을 들어주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비록 부과 중지중이었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였으나,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해주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폐지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 결국 과거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정책의 관성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의 발표내용과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과연 주택정책의 목표가 무엇이고 정책의 수혜대상은 누구이며, 정책의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정책들 중에는 행복주택, 목돈 안 드는 전세주택, 월세 세액공제 대책 등과 같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비판을 받거나 후속 수정대책을 발표하는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세대책처럼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세입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전셋값 인상 문제나 전세주택의 부족 문제, 급격한 월세화 문제, 높은 전월세 전환률 문제 등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더 많은 세입자와 가옥주들이 렌트 푸어와 하우스 푸어가 되어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새로운 주택문제의 등장과 새로운 해법 모색

사실 현재의 주택문제는 그동안 주택정책의 주된 수단이었던 대규모 주택건설과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된 주택문제였던 주택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주거 불안정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택보유자들은 가계부채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세 대란과 임대료 상승 때문에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가 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재개발구역과 뉴타운 지구에서는 재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채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자가 주택 소유를 촉진하고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내놓았다. 아울러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급여제도 확대 시행을 대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자가 주택 보유촉진 정책은 새로운 하우스 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더라도 세입자들이 2년짜리 월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

주거복지정책은 사업시행방식과 재원부담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 규모와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처럼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방식은 줄여나가야 한다. 시범사업지구에서 불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와 막대한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대규모 단지형 행복주택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기존의 거주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수선 등의 방법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문제가 단순히 주택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 소득수준별, 연령대별, 가구특성별로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다면 주택공급 방식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과거 주택의 공급주체가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면, 이제 그 중간 영역으로 주택협동조합, 준공공임대주택,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토지신탁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주택의 소유형태가 소유와 임대 두 가지로만 나뉘어졌다면 이제부터는 공동소유, 지분소유, 협동조합 소유, 토지를 제외한 주택만 소유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공유주택의 확산과 협동조합주택의 가능성

최근 주택문제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지는 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

에 주거문제를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나 공동체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를 공유형 주택이라 한다면 여기에는 협동조합주택, 셰어하우스(share house), 코하우징(co-housing) 등이 포함된다. 주택을 투자 상품이나 자산의 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는 주택의 본질적인 기능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주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중시한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협동조합주택은 서울시에서 가양동에서 착수한 임대주택관리형 공동보육형 협동조합이 최초로 시도된 이후 민간부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우징쿱을 필두로 성미산마을에서 함께협동조합이 구성되었고 민달팽이 유니온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란 청년주거공동체를 시작하였다. 아직은 제도적 미비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는 가양동에 임대주택 관리형 협동조합이 유일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분양형과 공동임대관리형 등이 시도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협동조합주택모형이 다양하게 시도될 것이다. 공공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사회복지결합형, 공공민간파트너십 등 다양한 모델들이 시도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는 ‘청년주거 해법을 제안합니다’라는 프로젝트 제언행사를 개최하여 청년들이 자신들의 주거문제 해법을 스스로 찾도록 지원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주거비를 낮추고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구상이 제시되었다. 여러 명이 주택을 공유하거나 공용함으로써 주거비를 낮추는 셰어하우스형, 비교적 주거비가 저렴한 농촌에 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주거비를 낮추려는 귀촌·생태주거형, 주택을 숙박시설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비싼 주거비를 보충하려는 게스트하우스형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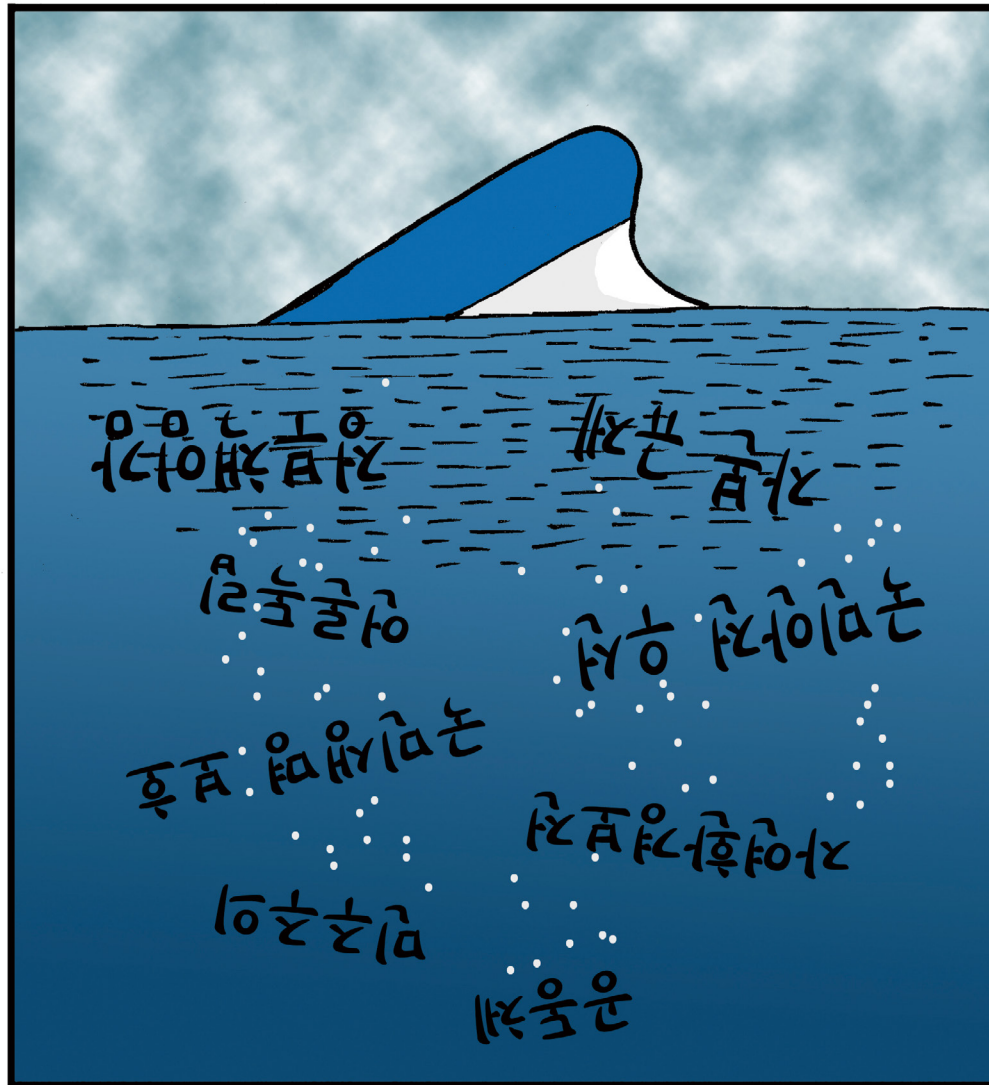
공유형 주택은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시 속에서 잃어버린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주택이 모든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주택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좋은 주거공동체를 만드는 사례가 확산된다면 새로운 주택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공유형 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소규모 단위에서 다양한 공유주택모형의 실험이 확대되고 좋은 사례를 창출해 낸다면 이 유형의 주택을 지원하는 법률이 뒤이어 제정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쿱 생협만평

이 동 수



논습지의 중요성과 보전대책

주용기(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1. 인공습지, 논

논은 습지의 범주 상 인공습지에 해당한다(<참고1>). 논은 자연습지보다 생태적 기능이나 역할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다양한 생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논농업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왔다.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서 벼라는 같은 작물을 재배하면서 독특한 농경문화를 형성해 왔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요즘 국제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수십 년간 논과 그 주변에서 서식해온 생물들의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많은 종들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논은 비정상적인 생태계로 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논으로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기농업, 자연농업, 즉 논농업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농업의 실천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미래농업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2. 논은 농촌의 생물다양성의 근간

논에 서식하는 생물은 조류, 어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갑각류, 초본류, 수목 등이다(<참고2>). 논에 자연 거름을 주면서 관리하는 논은 흙의 영양분이 풍부하여 많은 미생물이 번성한다. 그러면 미생물을 먹

이로 하는 생물 또한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먹이가 풍부한 논은 생물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또 먹이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수위가 안정되어 있고 수온도 높아 어린 개체가 자라기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물이 논에서 알을 낳거나 새끼를 키운다. 예를 들면 미꾸라지나 송사리, 메기 등의 성어는 수로를 터전으로 살아가지만 산란기가 되면 논으로 거슬러 올라온다. 또 물방개나 잠자리 등도 논에 와서 알을 낳는다. 논에는 개구리의 유생인 올챙이도 많이 자란다.

논을 둘러싼 물의 순환은 다양한 수서생물의 번식지, 먹이터, 서식처가 됨과 동시에 바다 → 강 → 논, 혹은 산 → 강 → 논으로 생물이 왕래하는 이동로가 되어 생물을 길러왔다. 또 논두렁은 물을 저장하는 뚝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통행 장소이기도 해서 수시로 풀 베기 작업을 해 왔다. 이 풀 베기 작업에 의해 다양한 식물이 공존하는 풀밭으로 유지 관리되어 왔다. 더욱이 논두렁은 논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중요한데 피난장소, 월동장소, 산란장소 그리고 가까운 산으로의 이동통로로서 중요한 장소다.

이러한 논에 모인 생물을 먹이로 하는 백로 등의 새도 찾아온다. 백로과 조류는 주로 마을 산을 보금자리로 이용하고 논은 먹이터로 이용한다. 이들 논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논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 논 주변의 환경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비도 사람이 사는 집에 둥지를 틀어 새끼를 키우고 논과 주변에서 모기, 파리 등을 잡아 먹어 어느 정도 개체 수를 조절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보답을 한다. 겨울철이 되면, 월동을 위해 황새, 두루미류, 기러기류, 오리류 등 겨울 철새들이 논경지에 찾아와 떨어진 벼 이삭이나 미꾸라지, 우렁이 등 먹이를 먹고 휴식을 한다.

<논 생물 순환도>



농촌은 논 뿐만 아니라 밭, 초지, 수로, 저수지, 마을 산 등의 다양한 환경이 모자이크 형태로 조합돼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이 다양한 것도 농촌에 생물이 많은 요인 중의 하나이다. 즉 논생물다양성은 논과 그 주변의 논, 밭, 수로, 웅덩이, 습지, 초지, 잡목림 등 다양한 환경이 필요하다.

논이라는 환경은 생물에게 있어서 물을 끌어들이고 물 빼기, 모내기과 벼 베기 작업에 의해 교란으로 불안정한 환경이지만 그 변화는 오랜 시간 동안 사계절의 변화처럼 매년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은 그 변화에 대처하는 적응 방법을 터득하여 같은 시기, 같은 환경에 매년 나타난다. 그래서 논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인간들의 작업을 스스로의 생활에 맞춤으로써 스스로의 생활을 적응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논생물다양성 확대가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근본대책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와 기러기의 먹이는 논에 떨어진 낙곡(벼이삭)이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가을 추수가 끝난 대부분의 논경지에서 소 사육용 여물로 먹이기 위해 거의 모든 벼짚을 말아버린 상황이라 먹이가 한 달 정도 더 빨리 떨어졌다. 낙곡의 양이 줄어들 때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야생조류들이 주택가 근처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접근해 먹이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야생조류들이 주택가나 축사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서라도 논생물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먹이 주기를 하는 것이 야생조류들의 확산을 줄이고 축사 근처까지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비책으로 필요하다. 군집성이 강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집단폐사의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대책으로는 조류들이 분산해서 서식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낙곡이 많은 넓은 농경지를 끼고 있어 방해받지 않는 커다란 저수지를 여러 군데 확보해 주어야 한다. 더욱이 환경부가

조류들이 많이 서식하는 논경지를 대상으로 1997년부터 시행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대상 지역과 예산규모를 더욱 높여서 논농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4. 논습지 보전을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 노력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성을 둘러싼 국가간의 협약이 체결되어 국제적인 움직임이 확대되어 왔다. 먼저 람사르 조약은 1971년에 이란의 람사르에서 개최된 습지회의로 세계인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체결되었다. 1992년에는 지구 정상회의(리우데자네이루 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이 시작되었다. 2005년에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고, 2008년 경남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와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제10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10: COP10)에서 ‘논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이 같은 협약을 통해 논생물다양성 및 논생물의 수질정화 효과, 논생물의 지구온난화 억제 효과에 관한 기대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2008년도에는 10월 25일부터 27일, 총 3일에 걸쳐 ‘세계 NGO 습지회의’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Ramsar COP10)가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개최되었다. 이 본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공동으로 제안한 ‘논 결의, X-31,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생물 다양성의 증진’은 아시아다운 결의로서 시민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하다는 것, 주민과 시민을 위한 조약,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약, 즉 21세기형의 조약이기에 지역으로부터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므로 주목받았다.

결의문 <X-31> 서문에서 이 결의의 초점은 조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화로운 습지 시스템으로서 타당한 논생태학적 또는 문화적 역할과 가치

유지와 향상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논 문화의 중요성’까지 한발 내디딘 내용으로 그것을 지킬 것을 조약 결의의 근간으로 한 것은 획기적이다. 또 당사국에 대해 습지보호 목적을 한층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논 농업’의 실천을 위해 논·농지의 식물상, 동물상 및 생태적 기능과 논과 습지시스템으로서 생태학적 가치를 유지해 온 논농업과 공동체 안에서 발전해 온 문화에 대해 심층 조사를 권장했다.

당사국에 대해 ‘지속가능한 농법과 물 관리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농법과 지역의 정보를 정부 간 부처, 농업인, 보전기관으로 넓혀 정보를 교환할 것을 최종 결의에 함께 넣었다. 즉 전통적으로 생물다양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해서는 그것을 ‘농업유산’으로 인정하고 농업인을 중심으로한 정보교환과 연구의 장 제공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또한 최종 결의문에는 ‘쌀은 적어도 114개 나라에서 생산되어, 세계의 절반 이상의 주식으로서 세계의 칼로리 공급의 20%를 점하고 있다’는 것, 또 논은 ‘인간의 건강’, ‘식량안전보장’, ‘빈곤 감소’, ‘지속가능한 습지관리’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생물다양성 향상의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논이 곤충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물새의 이동 경로 및 개체군의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최종적으로 논에 관한 수생 생물의 다양성이 농촌 사람들의 영양, 건강, 행복에 공헌한다는 것, 앞으로 ‘농업 생물 다양성 지표’를 국제적으로 작성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 ‘논, 자연 습지, 습지와 하천 유역 관리지침’을 각국이 작성하는 것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국제중요농업유산체계(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와도 연계시킬 것을 결의문에 포함시켰다(<참고3>).

이 결의문의 채택으로 건전한 논이 생물 다양성 향상에 공헌한다는 것을 세계에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 결의문은 이후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의 결의문 <X/34>에도 농업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각국 정부는 농업 생물다양성의 국가적인 목표 수준을 확립하고 그 목표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넣도록 이 전략을 재검토하며, 명확한 일정표에 맞추어 행동계획을 짜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략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책임과 예산을 만든다’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서는 2014년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행사를 ‘습지와 농업’이라는 주제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5. 정부는 논습지 보전과 논·농지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적극 나서야

올해 9월 29일에서 10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제12차 생물다양성총회 당사국 총회(CBD COP12)가 개최된다.

그런데 200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논습지 결의문’이 채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논습지’를 ‘습지보전법’에 인공습지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이라도 논을 습지로 규정하고, 논·농지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 도로, 저수지 등 인공시설물로 인해 사라져가는 논습지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국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생산 중단, 수입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GMO표시 의무화 및 수입 규제 강화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GMO에 대응해 국민들의 건강유지와 국내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쿱, 한살림같은 생협조직들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국민 홍보와 함께 정치권이 법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협동경제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6대 전략 및 18개 실천목표)의 ‘전략 4’, ‘목표11’에는 농업

생물다양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예산계획이 빠져 있어서 일정에 맞게 실행이 될지 의문스럽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국제 협약의 가입국가이자 총회 개최국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법 제도와 관련 예산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참고 1> 습지란?

습지보전법에 의하면 ‘습지’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 "연안습지"는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정의한다.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에서 정의한 습지는 ‘자연 또는 인공이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 또는 흐르고 있든 담수, 기수 혹은 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물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간조선으로 수심 6m를 넘지 않은 해수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람사르 협약에 규정한 습지의 유형(42가지 유형으로 분류)은

- 내륙습지 (inland wetland) : 영구적, 계절적 하천, 내륙 삼각주와 범람원, 영구적 및 계절적 호수와 연못 등. 강이나 하천은 란사르 협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내 습지보전법에는 제외되어 있다.
- 연안습지 (coastal wetland) :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 우리나라는 간조 때 수위선과 접하는 경계선까지만, 즉 갯벌만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습지보전법에는 강하구를 내륙습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란사르 협약에서 제시된 것처럼 연안습지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 인공습지 (artificial wetland) :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습지(양어장, 연못, 관계수로, 논, 염전, 저수지, 보, 댐, 토사채취장, 하수처리장 등). 인공습지는 자연습지(내륙습지와 연안습지)보다는 기능과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공습지는 우리나라의 습지보전법에서 제외되어 있다.

<참고 2> 논에 서식하는 주요 생물종(총 232종)

- 수서 무척추동물(51종) : 물장군, 꼬마잠자리, 애반딧불이, 꼬마등글물벌레, 검정물방개, 물방개/ 알락물진드기, 민무늬물벌레, 동쪽개알물방개, 점토물방개/ 황나각다귀, 애기각다귀, 날도래류, 물맴이, 아담스물방개, 애등줄물방개, 왕물벌레, 방개아제비, 줄무늬물방개/ 깔다구류, 등에류, 모기류, 물자라류, 자색물방개, 알물방개, 꼬마물방개, 애기물방개, 물자라, 장구애비, 게아제비, 긴개알소금쟁이, 애소금쟁이, 소금쟁이, 등빨간소금쟁이, 물가파리류, 아시아실잠자리, 황등색실잠자리, 가는실잠자리, 묶은실잠자리, 중간밀잠자리, 큰밀잠자리, 밀잠자리, 베치레잠자리, 사돈물뽕뽕이, 북방물뽕뽕이, 애물뽕뽕이, 꼬마물벌레, 애넓적물뽕뽕이, 뒷가시물뽕뽕이, 각시물자라, 호르बाट드개알소금쟁이
- 식물(84종) : 가시연꽃, 끈끈이귀개, 끈끈이주걱, 매화마름, 물부추, 참물부추, 순채, 들통발, 물고사리, 둥근잎택사, 물꼬리풀/ 긴흑삼릉, 꽃창포, 물여뀌, 민구와말, 수염마름, 좀여리연꽃, 창포, 벼풀, 흑삼릉, 꽃여뀌/ 낙지다리, 등칠했, 물질경이, 통발, 애기봄맞이, 네가래, 은행이끼, 좀개수염, 물옥잠, 올챙이자리, 올챙이솔, 올미, 택사, 질경이택사, 물쇠뜨기, 애기골무꽃, 구와말, 생이가래, 노랑여리연꽃, 병아리방동사니, 마디꽃, 여뀌바늘, 논뚝외풀, 수염가래꽃, 애기가래, 알방동사니, 쇠털골/ 가막사리, 한련초, 보풀, 바람하늘지기, 여뀌, 미꾸리낚시, 고마리, 수영, 점나도나물, 벼룩나물, 뚝새풀, 쇠별꽃, 왜젓가락나물, 개구리자리, 좀고추나물, 속속이풀, 가락지나

물, 자귀풀, 물별이끼, 배암차즈기, 발뚝외풀, 주름잎, 선개불알풀, 큰개불알풀, 중대가리풀, 지칭개, 가래, 물달개비, 골풀, 사마귀풀, 조개풀, 띠, 나도겨풀,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파대가리

- 어류(13종) : 잉어, 이스라엘잉어, 붕어, 떡붕어, 참붕어, 미꾸리, 미꾸라지, 메기, 뱀어, 송사리, 드렁허리, 꺾지, 가물치

- 조류(84종) : 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재두루미, 뜸부기, 황새, 먹황새, 노랑부리백로, 개리, 저어새/ 큰기러기, 고니, 노랑부리저어새, 시베리아흰두루미, 매, 솔개, 독수리, 붉은배새매, 검독수리, 큰덤불해오라기, 제비, 귀제비, 뿔종다리/ 쇠기러기, 큰고니,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호사비오리, 황로, 새호리기, 향라머리검독수리, 흰죽지수리, 물수리, 잣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조롱이, 새매, 참매, 왕새매, 캐나다두루미, 알락꼬리마도요, 민댕기물떼새, 댕기물떼새, 흰목물떼새, 깍도요, 수리부엉이, 올빼미, 참새, 검은머리족새, 무당새, 쇠검은머리쑥새/ 황오리, 알락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가창오리, 해오라기, 검은댕기해오라기, 왜가리, 중백로, 쇠백로, 흰배뜸부기, 쇠뜸부기사촌, 검은가슴물떼새, 흑꼬리도요, 학도요, 쇠청다리도요, 알락도요, 좀도요, 작은도요, 흰꼬리좀도요, 종달도요, 메추라기도요, 갈까마귀, 떼까마귀, 까마귀, 큰부리까마귀, 쇠종다리, 북방쇠종다리, 열은발종다리, 족새, 중대백로, 알락해오라기

<참고 3> <람사르협약 결의문 X-31> 습지로서의 논 의 생물다양성 증진

1. 본 결의문은 쌀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고 114개국 이상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칼로리의 2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공급해 왔음을 인정한다.

2. 본 결의문은 전 세계의 식량 공급과 그 비용, 그리고 식량 증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습지와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관한 결의문

10.23이 인간의 건강, 식량 확보, 가난 구제, 습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당사국들로 하여금 “습지의 보전, 물, 건강, 식량 확보, 빈곤 근절과 관련된 부문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음을 인지한다.

3. 본 결의문은 전 세계 쌀 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업적 경관인 논이 수 세기 동안 다양한 쌀 재배 지역에서 넓은 개방된 수면을 제공해왔고, 이에 더하여 동식물성 식량자원, 약용작물 등을 제공해왔으며 그 결과 습지체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인간의 생계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어왔음을 인정한다.

4. 본 결의문은 논이 전 세계 수많은 지역에서 파충류, 양서류, 어류, 갑각류, 곤충 그리고 연체동물과 같은 중요한 습지의 생물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물새 이동경로와 물새 개체 수의 보전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5. 본 결의문은 논과 관련된 수생생물의 다양성이 지역민들의 영양, 건강,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6. 또한 본 결의문은 일부 특정지역에서 물을 담고 있는 논이 주변의 자연적, 준자연적 서식처와 연결되는 것 특히 습지와 연결되는 것이 생물 종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7. 본 결의문은 ‘논’이 람사르 협약의 습지분류체계에서 인공습지 (Type 3. 관개된 땅; 관개 수로와 논)로 포함되어 있으며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는 논은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으며 최소 100개 이상의 전 세계적으로 지정된 람사르 사이트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 개

체군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생물 다양성을 지탱하고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하는 논 서식처를 포함하고 있음을 상기한다.

8. 본 결의문은 논과 관련된 일부 람사르 사이트들이 유엔식량농업기구에 의해 시작된 국제적으로 중요한 농업유산체계(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에 포함될 수 있고 지역 고유의 기술, 문화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중요한 지역들에 대한 활발한 보전을 장려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 람사르 사이트들이 습지의 현명한 이용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9. 본 결의문은 지속가능한 습지체계로서의 논역할에 대한 현재의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과 물 관리 및 자연적인 흐름의 변화, 외래침입종을 포함한 새로운 종의 도입, 해로운 농약의 빈번한 사용, 타 용도로의 부적절한 논역할변경과 관련된 부적절한 농법과 같은 요인들에 의한 주변 환경에 대한 현재의 그리고 잠재적인 영향에 우려를 표한다.

10. 본 결의문은 논이 쌀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시기에 논에 물을 채워두는 것과 같은 일부 물 관리 방법들이 물새를 비롯한 생물종에게 적절한 서식처를 제공하고 잡초 및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음에 주목한다.

11. 또한 본 결의문은 습지를 부적절하게 논으로 바꾸어 이용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지역의 생물 다양성 및 관련 생태계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려하며 본 결의문이 기존의 자연습지를 인공습지로 변형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기존의 토지를 인공습지로 부적절하게 변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 또한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12. 또한 본 결의문은 람사르 협약,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 그리고 기타의 관련 있는 국제적 규약에 부합되고 조화되게 습지체계로서 논이 갖는 생태적, 문화적인 역할,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에 그 요지를 두고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13. 본 결의문은 결의문 8.34 (2002)에서 농법들이 습지의 보전이라는 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일부 중요한 습지생태계를 뒷받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과학기술 검토패널과 농업과 습지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침(Guidance on Agriculture-Wetlands Interactions: GAWI) 이니셔티브가 유엔식량농업기구, 와겐닝겐대학 및 연구센터, 국제물관리연구소, Wetland Action, 국제습지보호연합과 함께 습지와 농업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침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결의문 8.34에 대한 대응조치들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14. 본 결의문은 논 농업과 관련된 정보 및 결과물들을 농업-생물다양성 지표를 포함한 농업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작업과 출판물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고 습지와 물, 쌀 경작에 관한 정보는 농업에 있어서의 물 관리의 포괄적 평가(Comprehensive Assessment of Water Management in Agriculture: CA)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국제물관리연구소가 과학기술 검토패널을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람사르 협약의 습지 유형별 분포와 대표성에 관한 분석에 인공습지로서의 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5. 당사국들로 하여금 습지보전목표들을 보강하고 지하수 재충전, 기후순화(climate moderation), 홍수 및 침식 조절, 산사태 방지, 동식물성 식량 자원 및 약용작물 제공,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같은 생태계 서비스

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논 농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논·농지의 식물상, 동물상 그리고 생태적 기능에 관한 그리고 습지체계로서의 논·농지의 생태적 가치를 유지해 온 논 농업을 하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문화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장려하도록 촉구한다.

16. 당사국들로 하여금 람사르 습지 등록이나 식량농업기구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농업유산시스템 프로그램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지정된 습지 지역에 대한 보호와 인식을 고려하도록 요청하고 더 나아가 당사국들이 지속가능한 쌀 농법과 물 관리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농민, 보전기관 간에 이러한 농법과 지정된 습지에 대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17. 당사국들이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맥락에서 습지체계로서 논을 관리하는 것, 논과 자연습지, 그리고 강 유역 사이의 연결성에 대한 개념과 지속가능한 농법의 장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한 당면과제와 기회들을 파악하고 이에 더하여 농가의 구성원, 주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영양, 건강, 삶의 질 향상과 물새 개체군의 보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연의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논·농지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논·농지의 계획수립, 농업실천, 물 관리를 파악하고 활발히 장려하기 위하여 보전부처가 농업부처 및 쌀 생산, 질병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촉구한다.

2) 식량 생산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인식하는 동시에, 논·농업이 강 유역 프로세스와 상·하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결의문 10.19에서 채택된 습지와 강 유역 관리에 관한 람사르 협약의 지침을 적절히 활용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러한 계획수립, 농업실천, 물 관리가 이행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3) 논과 관련된 계획수립, 농업실천, 물 관리가 자연 습지 또는 기타 서식

처들의 부적절한 인공습지로의 전환을 통하여 기존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해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4) 수인성 질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질병 매개체 그리고 논에서의 과도하고 부적절한 농약의 사용과 관련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상급에서 언급된 사항들에 부합되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18. 과학기술 검토패널로 하여금 관심 있는 타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다음 사항들을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

1) 논이 관리되는 방식에서의 차이점과 GAWI 파트너십의 작업을 고려하여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생태계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 논·농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마련할 것

2) 필수적인 식량 생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습지의 생물다양성과 습지의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 또는 강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쌀농업에 대한 교육과 논 관리법과 관련된 이용가능한 지침 및 정보를 식량농업기구, 국제물관리연구소(IWIMI), 국제벼연구소(IRRI), 아프리카벼센터(WARDA), GAWI 파트너십 등과 협력하여 검토, 배포, 상호 교환할 것

<참고 4> 전략4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목표11 농업, 수산, 산림 생물다양성 증대

- 실천과제의 1)항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업 생물다양성 회복
 - 농경지 생물 다양성 조사 및 영향 평가(2014~)로 관리기법 토대 마련
 - 농경지 서식생물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고 유기농경지 생물 다양성 인벤토리 확대(365건→2천 건)로 농경지 생물다양성 관리기법 개발 기초 자료 축적
 - 친환경농법, 외래 천적생물 도입이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생물다양성 보존형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2015~)
 - 경작 대상 생물만이 농경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농지생태계가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병해충 예방·관리기술 개발(2014~)
 - 생태집약형 친환경 유기농 재배기술을 개발

한국논습지네트워크(2013). 『제8회 한일논생물조사교류회 자료집』

2014년 3월 18일에 확정된 ‘제3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2012). Report for Ramsar COP11 on Good Practices for Enhancing Biodiversity in Rice Paddy Ecosystem in Japan, Ramsar Network Japan.

Leaflet_Ramsar_World Wetlands Day 2 February 2014_Wetland and Agriculture Partners for Growth(www.ramsar.org/cda/en/ramsar-activities-wwds-wwd2014index/main/ramsar/1-63-78%5E26287_4000_0__) 

참고문헌

강대인(2005). 『유기농 벼농사』, 들녘출판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2012). 『람사르 COP10 결의문 X-31 이행과 논 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한일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자료집』

구레치 마사유키 외 지음(2009). 『논습지와 람사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박세길(2007).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시대의창 출판사

배지현 · 권혜길 · 한민수(2011). 『논에서 만나는 133가지 생물도감』, 그물코출판사

백승우 · 유병덕 · 안병덕 · 안철환 · 유정길(2013). 『유기농을 누가 망치는가』, 시금치 출판사

이나바 미스쿠니(2013). 김준영 옮김. 『무농약 유기 벼농사』, NPO법인 민간벼농사연구소 책임감수, 들녘 출판사

와시타니 이즈 외(2010). 『논농업과 생물다양성』, 박광래 옮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요시다 타로(2011). 『농업이 문명을 움직인다: 역사를 바꾼 고대 농업의 수수께끼』, 들녘 출판사

정대이 편저(2013). 『유기농은 꼭 이루어진다』, 들녘출판사

전국귀농운동본부 엮음(2012). 『생태농업이란 무엇인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보급소 엮음(2011). 『도시농업』, 들녘출판사

천주교환경연대(2004). 『생명의 쌀』

삶의 질 높여줄 ‘우리의 집’을 구상하다

김은남(<시사IN> 기자)

‘청년주거협동조합 모두들’을 만나러 가는 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인천 방향으로 가는데 문득 정차역 안내방송이 차례로 귀에 들어온다. “이번 역은 온수, 성공회대 역입니다.”, “이번 역은 역곡역입니다. 가톨릭대·유한대로 가실 분은 이 역에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소사, 서울신대 역입니다.” 불과 지하철역 세 곳을 지나는데, 대학 이름 4개가 줄줄이 병기돼 있다.

청년주거협동조합 모두들(이하 모두들)은 서울 서남부 외곽에 위치한 이곳 대학촌에서 태동했다. 이들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1만 명은 넘고도 남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학마다 자취하는 학생이 많은 만큼 당연히 인근에 세를 놓는 집도 많다. 대학 기숙사만으로 이들을 수용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두들’은 집을 구하기 힘든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일까? 그렇지 않다. ‘모두들’을 만들자고 처음 모인 이들은 이곳 일대에서 대학을 나왔으되, 졸업 후에도 동네를 떠나지 않고 눌러 살던 이들이다.

이들이 모여 산다는 ‘두더지 하우스’ 2호점은 소사역에서도 15분 가량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자리 잡고 있었다. 기자가 이들을 찾아간 5월 28일은 이름하여 ‘별볼일 없는 식당’ 예비모임이 있던 날. 말이 식당이지 그냥 함께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자리라고 했다. 2호점에 현재 살고 있는 세 명 외에 1호점 입주자 세 명도 모두 모였다. 여기에 장래의 입주 희망자까지 더해 십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다 보니 두세 평 남짓한 거실이 짝 찬다.

이날의 메인 요리는 자쫄빔 가지. ‘모두들 전속 셰프’로 통하는 순대(본명은 이상은)가 솜씨를 뽐냈다(이곳 입주자들은 서로를 닉네임으로 부른다. 본명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주자도 있어 기사에서도 이들 이름을 닉네임으로 처리했다). 에피타이저로 나온 가지 무채 롤에 이어 중국식으로 볶아낸 가지 볶음, 가지 튀김 요리가 차례로 상에 오르자 너도나도 “너무 예쁘다” “맛있겠다” 감탄사를 쏟아내기 바빴다. 그 와중에 사회를 맡은 땡땡(김이민경)이 한마디 한다. “오늘의 메뉴가 꼭 우릴 닮지 않았나요? 우리가 가지가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가지가지 해 보기.’ 청년주거조합 모두들의 정체성은 어쩌면 이 한 마디로 압축될 수도 있겠다. 이들은 스스로를 ‘두더지’라고 표현한다(협동조합 명칭인 ‘모두들’은 ‘모여라 두더지들’의 약칭이다). 자기만의 굴 속에 틀어박혀 자신을 둘러싼 문제들로 괴로워하던 두더지. 이게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학창 시절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다. ‘모두들’ 창립 멤버인 땡땡과 순대, 개미(김혜민)가 처음 만난 것은 2009년 성공회대의 ‘꿈꾸는 슬리퍼’라는 노숙 모임에서였다. 자취할 집을 얻고 싶었지만 집 구할 돈이 없었던 대학생 몇몇이 ‘그렇다면 학교에서 살아보자’며 시작한 것이 꿈꾸는 슬리퍼(Sleeper)였다. 이들은 캠퍼스 한켠에 텐트를 치고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났다. 그러면서 2주간 만 원으로 밥 세 끼를 해결하는 ‘밥 모임’, 빚 프로젝트를 이용해 함께 영화를 보는 ‘작은 영화관’, 참여형 미술 프로그램인 ‘항동 아트센터’ 등을 진행했다. ‘돈 권하는 사회’에서 돈 없이도 즐겁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이들의 저항은 20대의 빈곤과 주거 문제를 상징하는 대학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 땡땡은 말한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뒤로는 이들도 각자 밥벌이를 찾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학을 떠났어도 이들의 주거지는 대부분 부천의 역곡·소사동 일대였다. 시민단체에서 일하거나 알바로 뛰면서 버는 박봉으로는 달리 선택지가 없었다. 본래 역곡·소사동 일대는 서울에 비해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이 동네를 떠나고 싶어한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동네라 여기는 까닭이다. 개미와 땡땡, 순대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각자 바쁘게 살던 세 사람이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칠 일이 생겼다. 슈퍼마켓 앞에 놓인 야외 테이블에 마주앉은 세 사람은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불행하다’는 것이었다. “힘겹게 일하고 알바를 뛰면 뭐 하나. 버는 돈은 쥐꼬리만 한데 창문 하나 없는 좁은 원룸과 편의점 도시락 따위 부실한 한 끼 식사를 위해 그나마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써야 하는 게 우리 20대가 처한 현실이었다”고 개미는 말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내 집은 없고, 매달 집세 걱정과 대출 받은 학자금 상환 압박만 닥쳐오는 나날이었다.

각자 하는 일도 전혀 즐겁지가 않은 상태였다. “누구는 직장에서, 누구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윗사람이었다. 우리는 그 치다꺼리나 해야 했다. 그 상황이 갑갑하게 느껴졌다”고 땡땡은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동적인 노동 말고 주체적인 노동, 내가 주인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강렬하게 솟구쳤다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돌파구로 이들이 떠올린 것이 협동조합이었다. “이제껏 우리는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열심히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과연 혼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라고 땡땡은 말했다. 이들의 고민은 결국 “내 집 마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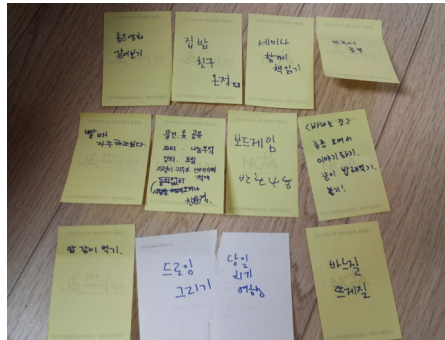
어렵다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우리의 집’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여럿이 힘을 모으면 보다 적은 집세로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을 터였다.

2012년, 이 같은 고민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청년주거협동조합 모두들이다. 이름을 모두들(모여라 두더지들)로 정하는 데는 별 이견이 없었다. “외부와 단절되고 고립된 채 살아가는 외로운 두더지와 우리의 삶이 다를 바 없었다. 청년들에게 ‘모여라!’라고 외침으로써 굴 밖으로 나온 두더지들이 더는 혼자서 아픔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고 개미는 말했다.

이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뜻을 같이할 사람들을 모으고, 협동조합의 원리와 작동 방식에 대해 공부해 나가면서 관계를 다져 나갔다. 그러면서 나름의 협동조합 모델을 만들어 나갔다. 일단 모두들은 조합원을 공급자 조합원과 소비자 조합원으로 나누기로 했다. 주거협동조합의 경우 무엇보다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들이 사는 역곡·소사동은 보증금 천만 원에 월 40~50만 원 정도면 방 3개짜리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을 구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빌려주거나 집을 제공하는 사람을 공급자 조합원으로 모집하기로 한 것이다. 공급자 조합원의 경우 보증금을 빌려주면 조합으로부터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소득(연 5%)을 얻게 된다. “천만 원을 은행에 맡겨봐야 이자가 얼마나 되겠나? 그러나 우리에게 천만 원을 투자하면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집을 제공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개미는 말했다. 덕분에 소비자 조합원은 목돈(보증금) 부담 없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런 데 드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앞으로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으면 조합 업무를 전담할 직원 조합원도 두고 싶다는 것이 모두들의 구상이다. 공급자, 소비자는 아니 되 이들의 뜻에 호응하는 이들을 위해 후원자 조합원 제도도 두고 있다. 협동조합 형태로 보자면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모델을 채택한 것이다.



2013년 8월 열린 입주 설명회. 모두들의 출범을 대외적으로 알린 첫 행사다.



입주 전 예비 모임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적으며 서로를 알아나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큰 틀을 짠 모두들은 2013년 가을 첫 번째 '두더지 하우스'를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두 차례에 걸쳐 입주 설명회를 열었다(조합원들이 함께 사는 주택을 이들은 두더지 하우스라 부른다). SNS 등을 통해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각의 설명회에는 40~50명 가량이 모였다. 대성황이었다. 첫 번째 집의 보증금을 빌려줄 공급자 조합원도 뜻밖에 손쉽게 확보됐다. 서울 남산 해방촌의 '우주살림협동조합 빈고'가 이들에게 선뜻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해방촌에 모여 '빈집'이라는 공동 주거 주택을 운영해 온 이들은 빈집이 자리를 잡으면서 '해방촌 빈가게'라는 동네 카페와 '빈고'라는 공동체 은행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빈집을 대표해 모두들 입주 설명회에 참석한 지음씨는 "빈고 또한 집 보증금을 함께 모으기 위한 마을 공동 금고로 출발했다. 부천에서 공동 주거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소식에 다들 기뻐하며 대출을 결정했다. 대출이라기보다 서로 힘을 모아 필요한 돈을 융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협동조합 간의 협동'으로 두더지 하우스 1호가 무사히 마련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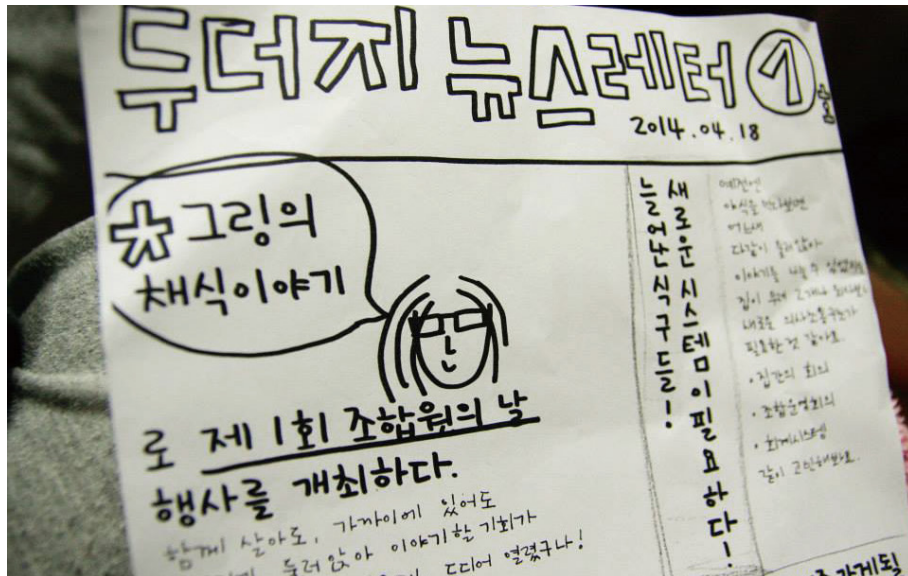
문제는 예상보다 두더지 하우스에 입주하겠다는 신청자가 적다는 사실이었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들어와 살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리면 어떡하지?' 걱정했던 우리가 무색했다"고 땡땡은 쑥스러워했다. 왜였을까? 일단은 홍보 방식과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미 이사철이 끝나고 대학가도 개학을 한 뒤라 새로 집을 구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더 큰 걸림돌은 '모두들'이 내건 주택 개방 원칙이었다. '모두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열린, '문턱 낮은 집'을 표방한다. 집이 비어 있는 낮 시간에 공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집을 개방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공헌한다는 것이 이들이 세운 목표였다. 이를테면 아이들을 데리고 편하게 모일 공간이 필요한 주부들이나 방과 후 공부방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거실 공간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개인의 사적인 공간은 보호하겠다고 했으나, 입주 상담을 하러 온 청년 중에는 이런 운영 방침에 난색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모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운영 방침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로 입주자를 모으고자 했다. 이는 집과 마을, 지역사회가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이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가치이기도 했다. 집을 '사는(buy)' 곳이 아닌 '사는(live)' 곳, '잠만 자는 곳'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 만들려면 마을과 관계를 맺는 방식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이들은 믿었다. 마을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의미 없는 공간'이 아니라 '소중한 이웃들이 살아가고 서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그 안에 있는 집도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 된다는 믿음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들을 만날 것인가.' 고민하던 이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글쓰기 강좌를 개최했다. 이른바 '역곡 두더지 통신원'을 모집해 동네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기로 한 것이다. 통신원을 자원한 동네 청년들은 2주간의 워크숍을 거친 뒤 실전(?)에 투입됐다. 시장 상인, 분식집 아주머니, 약국 아저씨 등등을 두루 만나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방'을 찾아, 또는 집을 찾아 떠돌아야 했던 청년들의 삶도 오롯이 기록으로 담았다. 이렇게 모인 원고를 '모두들'은 지난해 겨울 <역곡 두더지 통신>이라는 소책자로 담아낸 바 있다.



조합에서 시험 삼아 만들어 본 뉴스레터. 조합원들이 함께 해나갈 일들을 꼼꼼히 짚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입주자 모집도 완료됐다. 이들을 중심으로 두더지 하우스 1호점이 문을 연 것이 2013년 10월이다. 올해 3월에는 2호점도 오픈했다. 1호점으로부터 걸어서 10분쯤 걸리는 가까운 거리다. 이 집은 입주자 중 한 명이 전에 살던 집 보증금을 그대로 출자하면서 공급자 겸 소비자 조합원이 됐다. 현재 1호점에는 여성 3명, 2호점에는 남성 1명, 여성 2명이 산다. 함께 살다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직장을 먼 곳에 얻게 되면서 다시 이사를 나간 조합원도 있다.

이들은 두더지 하우스에 이사 온 뒤 과거보다 훨씬 사람답게 살게 됐다고 말한다. 일단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모두들 조합원은 현재 조합에 처음 가입할 때 내는 출자금(30만 원) 외에 각자 사는 방의 크기에 따라 매달 18만~26만 원을 내는 것으로 주거비를 해결한다. 월세·공과금·생활비 외에 조합비까지 모두 포함된 액수다. 앞서 설명한 대로 조합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개인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없다. 입주 전까지 인근 대학 기숙사에 살았다는 다올은 “한 학기에 90만 원을 내고 대학 기숙사에 살았지만 2층 침대에서 생활하려니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기숙사 식당도 없어 식사도 혼자 해결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싼 비용으로 햇볕 잘 드는 넓은 방을 혼자 쓰는 데다 반찬거리도 공동 구매해 함께 밥을 지어 먹으니 삶의 질이 한결 나아졌다는 것이다.

가구나 가전제품은 쓰던 물건을 적극 재활용한다. 두더지 하우스 2호점 거실 한쪽에는 쓰지 않는 서랍장과 소파가 놓여 있었다. “얼마 전 이 동네에 살던 사람이 대학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취할 때 살림을 기증하고 간 것”이라고 2호점에 사는 이지향씨는 말했다. 자기네는 필요 없지만 앞으로 생길 두더지 하우스 3호점을 위해 이들 가구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두들은 평소 SNS나 개인 인맥 등을 통해 집에서 쓰지 않는 가구·가전제품 등을 기증받곤 한다. 이를 조합원들이 나눠 씬으로써 비용도 아끼고 환경도 살리니 말 그대로 일석이조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삶의 질을 더 높여주는 것은 서로 의지할 관계가 생겼다는 점이다. 이들의 삶은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는 않다. 뭇 모르는 사람들은 ‘공동 주거’ 하면 미드 <프렌즈>나 <룸메이트>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떠올리곤 하지만 모두들 조합원은 안다. 이는 ‘돈이 있어야만 충족되는 로망’일 뿐이라는 것을. 먹고 사는 문제는 ‘88만원 세대’가 대부분인 이들의 어깨를 늘 사정없이 짓누른다. “입주 초창기에는 밤마다 함께 모여 라면을 나눠 먹으면서 ‘알바천국’을 함께 뒤지는 날도 있었다”고 땡땡은 말했다.

다만 이들은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다고 입을 모은다. 2호점 입주자인 그링은 “예전에도 친구들과 함께 자취를 한 일이 있다. 그러나 그때는 서로 돈도 모자라고 해서 기능적으로 함께 산다는 느낌이 강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모두들에서는 서로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 노력하다 보니 훨씬 더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두더지 하우스의 ‘청일점’인 김현성씨 또한 입주 이후 가장 만족하는 점이 ‘외롭지 않다’는 점이라고 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상경한 특수학교 교사 김씨는 “서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가까운 데 원룸을 얻어 살게 됐는데, 한 달 관리비만 40만 원가량이었다. 적은 돈이 아닌데도 방이 너무 좁고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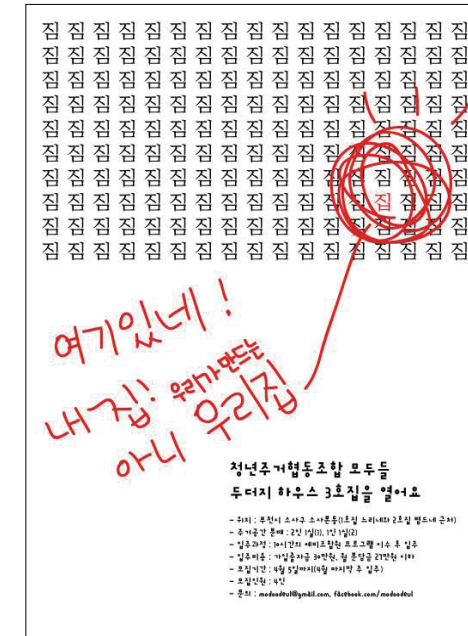
답해 다른 집을 구하려고 ‘부천 원룸’이라는 키워드로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 우연히 모두들을 소개한 글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만난 모두들에서 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긴 했지만 함께 산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외로운 타향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생겼다”고 그는 말했다.

모두들은 이것저것 해 보고 싶은 일이 많다. 일단은 문턱 낮은 집을 계속 실험해 볼 요량이다. 동네 이웃과 지역사회에 두더지 하우스를 개방한다는 계획은 이미 실천에 옮겨졌다. 집이 빈 낮 시간이면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회원 등이 이 집 거실을 빌려 회의를 한다. 이들에게 받는 공간 이용료 5천 원은 조합비로 적립한다. “앞으로 공간 여유가 되면 손님방을 따로 두어 당장 갈 데가 없는 가난한 청년들에게 내어주고 싶다”고 땡땡은 말했다. 지금까지도 두더지 하우스에는 실직했거나 잠시 머물 데가 필요한 청년들이 묵다 가곤 했다.

마을과 맺는 관계도 계속 넓혀갈 계획이다. 협동조합을 하면서 마을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왜 꼭 서울이어야 하나? 지금 내가 몸담은 동네를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는 없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이들은 말한다. 주민들과 부대끼는 다양한 기획을 통해 마을살이가 풍요로워지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네 일자리도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 모두들은 동네 주민들과 함께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모임을 하나 둘 만들어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집을 나와 부천 일대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해 이를 책으로 묶으려는 작업도 시작했다. 이름 하여 ‘탈가정청소년 주거권 실태 보고서 프로젝트’다. “장기적으로는 거리의 청소년들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과 청년들이 함께 사는 집도 만들어 보고 싶다.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함께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땡땡은 말했다. 여건이 되면 지난해

만든 <역곡 두더지 통신>에 이어 소사동 사람들의 얘기를 담은 <소사 두더지 통신>도 만들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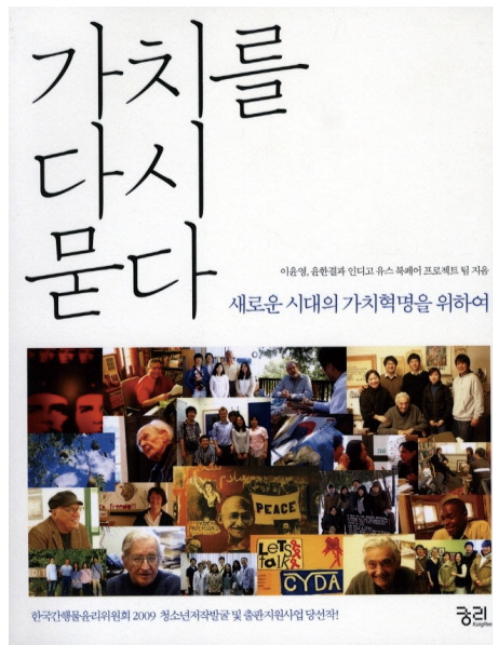


모두들은 조만간 두더지 하우스 3호점을 열 계획이다. 사진은 3호점 입주자 모집을 알리는 포스터.

이들이 이런저런 일을 벌이는 힘은 조합원 모임에서 나온다. 한 달에 한번 ‘1호집 회의’ ‘2호집 회의’ 식으로 회의가 정례화되어 있다지만 그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는 밤마다 거실에 둘러앉아 벌이는 수다 자리에서 나온다. 6월부터는 ‘별볼일 없는 식당’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해 열 계획이라고 모두들은 밝혔다. 공동 주거에 관심이 있거나 모두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식당이다(관련 문의는 www.facebook.com/modoodeul). 때로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로서로 엮이어 ‘집’처럼 든든한 관계를 다져가다 보면 ‘별 볼 일 없는 동네’도 ‘별 볼 일 있는 특별한 동네’가 될 수 있으리라고 이들은 믿는다. 별 볼 일 없는 자신들이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icoop

평화를 품고, 꿈을 실현하라 『가치를 다시 묻다』를 읽고

신미정(구로생협 조합원)



구로생협 인문학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게 되는데, 이번에 우연찮게 3년 전에 구입해 혼자 읽다가 결국 구석으로 밀어 뒀던 책, 『가치를 다시 묻다』가 이번 달 토론도서로 선정되었다. 구성원들과 함께 읽어 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 것이고, 포기했던 책을 다시 도전해보는 것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어 책을 집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고 눈물의 소용돌이로 물고 간 ‘세월호 대참사’의 모든 주범들에게 가치를 다시 물어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치 체계로부터 초월하는 ‘초인’이 되기보다는 그러한 가치 체계를 다시 물음으로써 잘못된 가치체계를 바로잡고 새로운 가치체계를 창조하는 ‘진정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전 세계 6 대륙에 하나의 가치 쌍을 연결하여 그곳의 학자, 개인, 단체, 특히 청소년, 청소년 팀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책! ‘새로운 시대의 가치혁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인디고 서원들의 청년들이 요즘처럼 복잡한 위기들이 연속하는 시대에 ‘정의와 희망’ ‘평등과 다양성’ ‘자유와 자기실현’ ‘공동체와 민주주의’ ‘생명과 자연’ ‘아름다움과 사랑’ 등을 매개로, 새로운 시대의 가치혁명을 위하여 제대로 된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목표의식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밝은 미래를 다시 꿈꿔볼 수 있었다. 더불어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자 기획하면서의 설렘, 꿈같은 그분들을 눈앞에서 만났을 때의 떨림, 환희, 감동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어 내려갈 때 나 자신도 이미 그분들을 대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져다 준 밀려오는 감동으로 온몸에 전율이 일기도 했다.

그 중 나와 다른 가치관에 대해, 나와는 다르지만 내 가치관을 변화시킨 계기가 된 일부를 소개하고 싶다.

민주주의적 공동체를 위한 노력

공동체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삶을 더 발전시키고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KYPs 2009의 자반 아푸두의 인터뷰를 보고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더 큰 세계관, 그리고 더 큰 가치관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지난 2007년, 케냐에서는 케냐 및 아프리카 각지의 청소년들-단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만이 아닌 상대적으로 어른들에 비해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그렇기에 더 넓은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평화를 가슴에 품고, 꿈을 실현하라(Embrace peace, Fruit dreams)’는 주제의 청소년 평화 회의가 열렸다.

자반 아프두! 더 큰 사회에 기여하는 공동체의 좋은 모델이라 꼽는 이 청년! 우리 지금 사회에, 앞으로의 사회에 존재해야만 하는 우리 현재 청년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부정선거 후 반대 부족과의 마찰로 인해 폭력사태까지 번졌던 케냐 사회를 청소년들이 나서서 화해와 평화를 시키고, 민주주의적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해 나가는 활동과 노력들을 보면서 각종 이데올로기나 경제적 문제, 인종, 부족의 문제를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미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들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화해하여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를 재점검해 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우린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명목하에 온갖 법칙과 제도와 이론으로 평화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다. 약육강식의 초원에, 메마른 땅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한가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동물의 세계도 첨예한 균형을 이루며 평화를 이루고 있는데 말이다. 가족, 친구,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 땅, 물, 다양한 생물 종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들이 나와 같이 존재하고 있기에 느껴지는 생명성을 느끼며, 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무시 받고 짓밟히지 않도록 늘 열려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보편적 사랑이라는 가치

삶의 바탕에는 사랑이란 가치가 한없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사랑은 주춤거리는 마음을 없애는 생의 의지를 복돋는 가치이다. “필요한 것은 눈과 귀를 열고, 자신의 감수성이 가슴 왼편에서 맥박치게 하며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세상에 오래 존재했으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소중한 가치들을 돌이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공간, 소통하는 곳에서 유연함

과 사랑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곳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사랑은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모두 포용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라고 묵자는 지적하지 않았던가! 보편적인 사랑, 무차별적 사랑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국민의 안전과 풍요를 위해 빈곤한 지역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래를 하고, 내 기업이 성장하고 일류가 되기 위해 자연을 무참히 짓밟고, 나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누군가를 불행해지도록 만드는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보편적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예들이다. 보편적 사랑은 어렵고,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공동체적인 삶, 공존·공감·공생

우리는 모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존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하고 다시 묻는다. 가치를... 

GMO 오염의 대가를 치르게 될 유기농 생산자들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미국 농무부(USDA)의 GMO와 non-GMO의 공존가능성에 대한 의견수렴이 마무리된 가운데, OFARM(Organic Farmers' Agency for Relationship Marketing)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Food & Water Watch가 GMO농작물로부터의 오염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대가를 치루는 것은 non-GMO생산자들일 것이라는 보고를 지난 3월 발표하였다. OFARM은 생산자들의 상품 공동판매를 허용하는 카퍼-볼스테드법(the Capper-Volstead Act)에 의하여 미네소타주에 설립된 생산자협동조합으로 몬테나, 텍사스 켄터키, 오하이오 등 18개 주의 유기농 곡물생산 및 축산업에 종사하는 유기농 생산자 협동조합 6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17개 주, 특히 미국 중서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는 USDA생물공학자문위원회와 AC21(21세기 농업)가 불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 권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주로 생물공학의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이 위원회는 2011년과 2012년 회의를 통하여 GMO와 non-GMO 농업 공존과 관련된 아웃라인을 수립하고 GMO농작물 오염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데이터 부족으로 유기농 또는 non-GMO 농가가 입을 GMO와 관련된 피해비용을 추정할 수 없었으며 결국 마련한 것이 생산자들이 가입할 옵션 포함의 작물 피해보험이다.

설문조사는 GMO의 오염이 유기농 및 non-GMO생산자들에게 추가 노동 및 작업 시간 그리고 재정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에 반해 GMO 생산자들은 이러한 오염 위험성을 감소하라는 요구를 특별히 받지는 않고 있다.

이 설문조사에 응한 상당수의 생산자들이 OFARM 회원생협의 판매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오염 방지를 위하여, 회원 생산자들은 까다로운 미국 농무부 유기농 기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OFARM이 권고하는 추가 조치를 따로 채택하고 있다” 며 “그러나 너무나 자주, 생산자들은 GMO오염으로 생산물 판매 거부를 겪어야 한다. USDA는 유기농 및 non-GMO 생산자들이 겪은 피해를 인식하고 생명공학 기업 등 GMO와 관련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OFARM의 회장이자 캔자스 주의 유기농 곡물 생산자인 오렌 홀(Oren Holle)은 말했다.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¹

-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GMO와 non-GMO 곡물생산 공존에 회의적이다.
- 3분의 2이상이 효과적인 관리방식만으로는 유기농/non-GMO 생산자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응답한 생산자 6명 중 5명이 GMO오염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중 60%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 응답자의 3분의 1이 실제 자신의 농가에서 GMO를 발견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반 이상이 판매를 거부당했다고 답했다. 평균 약1,000부셀(1부셀= 27.2kg)의 손실 비용은 4,500달러이다.
- 응답자의 약 절반은 GMO 오염과 관련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농작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가입할 것이라고 답한 생산자의 75%는 GMO특허 보유자 또는 사용자(업체)가 GMO오염과 관련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 부담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출처 : Food & Water Watch 홈페이지 (www.foodandwaterwatch.org))

¹ 조사결과 원본 http://documents.foodandwaterwatch.org/doc/GMO_contamination.pdf

지역 및 생태농업을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탄생

캐나다 퀘벡의 CAPÉ(la Coopérative pour l'Agriculture de proximité écologique)는 2013년, 불어권 시장의 생산자들에게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하는 RJME(청년친환경채소생산자네트워크, 현재는 '즐거워친환경채소 생산자네트워크'로 이름이 변경되었다)의 회원들이 만들어 낸 협동조합이다(www.capecoop.org). 아직 시작단계인 CAPÉ는 대부분의 활동이 자원봉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몇 년 간, 퀘벡의 농업에서는 지역에서 생태적 생산 및 판매를 주도하는 새로운 생산자들의 움직임이 엿보였다. CAPÉ는 이들 생산자들이 한 목소리로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며, 언론 및 정치 등에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 CAPÉ는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전략을 세우고 이행할 목표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CAPÉ는 MAPAQ(퀘벡농수산물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공동판매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곧 몬트리올의 유명한 장탈롱(Jean-Talon) 시장과 같은 규모 있는 시장에 작은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대형 공공 시장의 (대량 다품종 판매를 유지해야하는) 공급기준에 맞추기 위해 퀘벡의 생산자들은 타 시장에서 생산물을 구매하여 이를 재판매해야 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함으로써, CAPÉ는 소규모 지역 생산자들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우며, 소비자들은 지역의 유기농 생산물을 더욱 자주 접할 수 있게 이끌고 있다.

CAPÉ는 또한 조합원들을 위하여 교육의 장도 마련한다. 곧 CAPÉ는 퀘벡의 다른 생태농업, 식량정의 및 식품공학 네트워크가 모여 제1회 팜핵(Farm Hack) 행사를 개최한다.

'팜핵'은 탑다운(top-down) 방식의 화학농약 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탄력적인 농업을 위하여 생산자, 개발자, 엔지니어, 건축가, 식품시스템 및 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이다. 팜핵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보 교환, 지식 축적을

통해 창조적인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간다. 디자인, 건축, 기술교육 및 문서 등을 통한 공식행사, 소프트웨어 해커톤 및 개념적 이론을 교환하는 포럼 등의 다양한 형태로 농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문서화하며 사용하기 쉬운 농기구를 이들이 직접 디자인하는 여러 노력을 함께 이끌어간다. 즉, 팜핵에서는 온실의 온도조절, 데이터 기록 및 문제 발생 시 핸드폰을 통한 안내 등, 생산자가 개발하는 전자도구개발이나 다양한 농기계 대여 모델에 대한 대화를 문서화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CAPÉ는 또한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를 마련한다. 이 협동조합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연방정부의 이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캐롤린 뒤프렌(Caroline Dufresne) 부회장은 자유무역협정, 종자법, 식품표시 및 GMO 등을 포함한 국가 식량 및 농업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조직들과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출처: 청년농업인네트워크 홈페이지(<http://youngagrarians.org>)) icoop

〈바로 잡습니다〉

지난 14호 “몬드라곤 파고르의 실패”(이시즈카 히데오)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고친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

73쪽 <표1>(90쪽의 원문)에서 연구개발 부문이 별도 셀로 표시되어 있던 것을 공업 부문 중, 연구개발 부문, 즉, 36,963명 중 2,096명으로 정정합니다. 즉, 연구개발 부문 2,096명이 36,963명의 공업 부문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표1>몬드라곤그룹의 개요(2012년, 전년대비) (단위 : 백만 유로)

항목				
총자산	35,887 (+10.6%)			
사업규모 (산업부문·유통부문)	12,903 (-7.6%)	수출 4,004		
기업 수	289개	협동조합 110	자회사 179	
협동조합	110개			
자회사	179개			
종업원 수 (비율은 표시한 대로)	80,321명	바스크 주 42% (33,734)	그 외 스페인 40%(32,128)	외국 17% (13,655)
공업 부문	36,963명	파고르 외	약100개 협동조합	조합원 비율 86%
중, 연구개발 부문	2,096명			
유통 부문	39,839명	에로스키생협 외		
금융 부문	2,486명	CAJA LABORAL은 행, LAGUN-ARO 공제조합 등		

교육 부문	1,033명	몬드라곤 대학 외	학생 수 11,248명	
연구개발 부문	2,096명	15개 센터		
투자 총액	331			
조합원 출자금	1,838			

출처 : informe annual 2012, CM 참고하여 작성

77쪽 <표6>(94쪽의 원문)의 파고르 가전그룹 수익에서는 (-)표기가 누락된 바 있고, 숫자 하나가 잘못 표기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81쪽 <표14>(99쪽의 원문)에서 스페인 국내 가전제품 제조대수 전년대비 증감률에서 2013년 전체 증감률 -64.12%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6.412%로 바로 잡습니다.

저희 편집진은 원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실어 독자께 혼돈을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icoop](#)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간도서

I. 단행본

번호	제 목	발행년도
1	『진짜 가격은 얼마입니까? 2013』(E-Book)	2014
2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 (니시무라 이치로 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번역모임 연리지 옮김)	2013
3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저, 정광민 옮김)	2013
4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서울특별시)	2013
5	『진짜 가격은 얼마 입니까?』(E-Book)	2013
6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김형미 외 저)	2012
7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에드가 파넬 저, 염찬희 옮김)	2012
8	『후쿠이생협의 도전』(일본생협연합회 엮음, 이은선 옮김)	2012
9	『일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 (오리토이샤오 저, 와카니시 케이코 일러스트, 이은선 옮김)	2012
10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사이토 요시아키 저, 다나카 히로시 옮김)	2012
11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이은선 옮김)	2012
12	『뒤엎벌은 어떻게 나는가』(이바노 바르베리니 저, 김형미·김영미 옮김)	2011
13	『생활속의 협동』(오사와 마리 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옮김)	2009
14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iCOOP협동조합연구소 · 한겨레 경제연구소 옮김)	2009
15	『협동, 생활의 윤리』(iCOOP생협연대 엮음)	2008
16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일본 21세기 코프연구센터 엮음,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옮김)	2006
17	『새로운 생협운동』((사)한국 생협연대 지음)	2002

II. 연구보고서

번호	제 목	발행년도
1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 iCOOP생협과 PFTC/AFTC의 파트너십 연구』(엄은희)	2014
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모음집』, 이론/사례/거버넌스(이경수 편역)	2014
3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4-04) 『대규모 협동조합 사업체의 거버넌스(1)』(이경수 편역)	2014
4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4-03) 『위기 동안 이탈리아 협동조합』(이경수 편역)	2014
5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4-02) 『무지개 깃발과 국제협동조합의 날 기원』(이경수 편역)	2014
6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4-01) 『협동조합 조합원과 운동』(이경수 편역)	2014
7	『훗카이드 지역 밀 산업의 시사점』(이향숙)	2014
8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지민진, 최은주)	2014
9	『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 만족도 조사』(손범규)	2014
10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5) 『참여 민주주의 공동 프로젝트 결과 보고』(이경수 편역)	2013
11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4) 『노동자 회생기업 현황과 관련 연구』(이경수 편역)	2013
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3) 『대규모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조합원 거버넌스 참여: 코퍼라티브 그룹 형성평가』(이경수 편역)	2013
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2-1)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관여』(이경수 편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2-2) 『이론과 실제에서의 협동조합 회사』(이경수 편역)	2013
14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1-1) 『규모화 vs 참여』(이경수 편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1-2) 『CWS 인수 시도』(이경수 편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1-3) 『거버넌스』(이경수 편역)	2013

15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0-1) 『푸드 데저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이경수 편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이경수 편역)	2013
16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09-1) 『식품부문 협동』(이경수 편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09-2) 『자주관리 돌봄-협동조합 접근방식』(이경수 편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09-3) 『지역복지·어르신복지와 생협』(이경수 편역)	2013
17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08-1) 『몬드라곤 인터뷰』(이경수 편역)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08-2) 『일본 생협과 지역사회』(이경수 편역)	2013
18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07) 『사회연대경제 이해하기』(이경수 편역)	2013
19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3-06) 『지역사회 발전』(이경수 편역)	2013
20	『생협의 사회 가치 -iCOOP생협을 대상으로-』(이향숙·지민진)	2013
21	(생활과 동향 1호)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발표(지민진)	2013
22	『2012 iCOOP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염찬희·손범규·지민진)	2013
23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장상환)	2013
24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5) 『로치데일』(이경수 편역)	2012
25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4-1)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조언 Tips』(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4-2) 『ICA 세계 협동조합 모니터』(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4-3) 『ICA 세계 협동조합 모니터 순위』(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4-4) 『캐나다 재생 에너지』(이경수 편역)	2012

26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3-1)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3-3) 『유릭스 베네치아회의 최종보고서』(이경수 편역)	2012
27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2) 『미국 협동조합 현황(1)』(이경수 편역)	2012
28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1-1) 『어떻게 사회적 혁신을 이룰 것 인가? 정책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하여』(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1-2) 『이탈리아 협동조합』(이경수 편역)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1-3)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1)』(이경수 편역)	2012
29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장종익)	2012
30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장종익·김아영)	2011
31	『iCOOP생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정해진)	2011
32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 회계 문제』(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엮음)	2011
33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협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생협-의 동향』,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엮음)	2011
34	『2009iCOOP생협 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염찬희)	2010
35	『생협 밸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김찬호)	2010
3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장원봉·하승우·임동현)	2010
37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생협운동을 중심으로』(염찬희·엄은희·이선옥)	2010
38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보고서 -한국생협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김주숙·김성오·정원각)	2007

Ⅲ. 포럼 및 후속교육 자료집

번호	제 목	발행년도
1	(제33회 포럼 자료집) 『윤리적생산을 위한 iCOOP생협 생산자들의 활동과 비전』	2014
2	(제32회 포럼 자료집)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2013
3	(시민사회포럼·한국NGO학회·iCOOP협동조합연구소 공동기획포럼 자료집) 『윤리적 소비와 시민사회』	2013
4	(제30회 포럼 자료집) 『한일 생협의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조사 결과발표』	2013
5	(제29회 포럼 자료집) 『iCOOP생협의 공정무역 현황과 방향』	2013
6	(제28회 포럼 자료집) 『농지가격이 친환경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2013
7	(제29회 후속교육 자료집) 『생활협동조합의 경제적 역할 분석』	2013
8	(제28회 후속교육 자료집) 『공정무역을 통한 인권회복 활동』	2013
9	(출판기념세미나 및 제26회 포럼 자료집) 『일본생협 매장사업의 실제와 시사점,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저자에게서 듣는 일본생협운동의 전망』	2012
10	(제27회 포럼 자료집) 『한국 사회의 물 공공성과 식수 안전성을 생각해 보다』	2012
11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포럼 자료집) 『한국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진단과 과제』	2012
12	(제25회 포럼 자료집)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2
13	(제24회 포럼 자료집)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2012
14	(제26회 후속교육 자료집) 『ICA 총회 및 해외 협동조합 연수 보고회』	2012
15	(제25회 후속교육 자료집) 『유럽 민중의 집과 지역 네트워크/ iCOOP생협 경험 연구 - 윤리적 소비와 지역생협 이사회 분석』	2012
16	(제24회 후속교육 자료집)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2012
17	(제23회 포럼 자료집) 『iCOOP생협의 새로운 생협운동 정책에 대한 평가』	2011
18	(제22회 포럼 자료집) 『공정무역 5년의 성과와 과제』	2011
19	(제21회 포럼 자료집) 『조합원 활동가 교육 현황 평가』	2011

20	(제20회 포럼 자료집) 『조합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 방향 모색』	2011
21	(제19회 포럼 자료집) 『iCOOP 직원복지의 바람직한 방향』	2011
22	(제23회 후속교육 자료집)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2011
23	(제20회 후속교육 자료집) 『북지구가 스웨덴에 대한 이해』	2011
24	(제16회 후속교육 자료집)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영국 방문 보고』	2011
25	(제14회 후속교육 자료집) 『개정된 생협시행령 시행규칙 내부지침에 대한 과정과 이해』	2011
26	(제18회 포럼 자료집) 『iCOOP생협 활동을 위한 이론 정리를 위한 토론』	2010
27	(제17회 포럼 자료집) 『유통인증 5년에 대한 평가』	2010
28	(제16회 포럼 자료집) 『2009년 iCOOP생협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 결과 보고』	2010
29	(제15회 포럼 자료집) 『생협에서 공제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방향』	2010
30	(제14회 포럼 자료집) 『생협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010
31	(제13회 포럼 자료집) 『통화 운동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2010
32	(제13회 후속교육 자료집) 『2010년 유럽영국몬드라곤 방문 보고회』	2010
33	(제12회 후속교육 자료집) 『개정된 생협법에 대한 과정과 이해』	2010
34	(제12회 포럼 자료집) 『생협의 노동과 임금』	2009
35	(제11회 포럼 자료집)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9
36	(제9회 후속교육 자료집) 『한국의 조세·재정 현황과 바람직한 방안』	2009
37	(제10회 포럼 자료집) 『람사르총회와 논습지 보전의 필요성과 과제 전망』	2008
38	(제9회 포럼 자료집) 『광우병 촛불 정국에서 생활 운동체인 iCOOP생협과 이후 과제』	2008
39	(제8회 포럼 자료집)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의 한국 경(제)와 생협 운동의 전망』	2008

40	(제7회 포럼 자료집) 『iCOOP생협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	2008
41	(제6회 포럼 자료집) 『새로운 대안운동으로써의 사회적 경제와 생협운동』	2007
42	(제5회 포럼 자료집) 『우리 밀 생산과 소비 운동의 성과와 이후 과제』	2007
43	(제4회 포럼 자료집)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의 사례와 향후 과제』	2007
44	(제6회 후속교육 자료집)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에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2007
45	(제4회 후속교육 자료집) 『사회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	2007
46	(제3회 포럼 자료집) 『생협에서 공정무역이 갖는 의미와 방향』	2006
47	(제2회 포럼 자료집) 『한국 사회의 식문화 현황과 문제점 - 식육법의 필요에 대하여』	2006
48	(제1회 포럼 자료집)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형성을 위한 생협의 과제』	2006

IV. 기타 간행물

번호	제 목	발행년도
1	『2013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3
2	『제8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2
3	『2012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2
4	『2011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1
5	『제7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1
6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1년 활동 자료집』	2011
7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5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생협운동의 기원과 전개』	2011
8	『2010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0
9	『제6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0
10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0년 활동 자료집』	2010

11	(iCOOP생협 ICA가입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가입과 생협의 사회적책임』	2009
12	『2010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09
13	『제5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9
14	(우리밀 1%의 기적 10%의 희망을 위한 정책 세미나 자료집) 『생산과 소비의 상생연계를 통한 우리밀 산업화의 과제』	2009
15	『제1회 대학원생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자료집』	2008
16	『제4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8
17	(iCOOP생협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iCOOP생협 10년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정리와 평가』	2007
18	(iCOOP생활협동조합연구소 2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윤리적소비의 방향과 실천적 모색-공정무역을 통한 제3세계 자원과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중심으로』	2007
19	(iCOOP협동조합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한일 생협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7
20	『제3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7
21	(출판기념 토론회 자료집) 『생협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2006
22	『제2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6
51	『제1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6

구입 / 열람 문의 : icoop-institute@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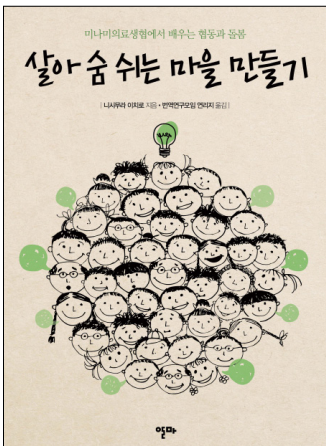
조지 제이쿰 홀리요크 지, 정광민 옮김 (2013)
그물코 | 400쪽 | 150 x 200 | 16,000원

[협동조합 고전 총서 1]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역사와 사람들 (원제)Self-help by the people : The history of the Rochdale Pioneers

협동조합운동의 세계적 고전, 협동조합 사람들의 필독서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역사와 사람들〉 첫 완역판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일 것이다. 영국 랭커셔 주의 작은 마을 로치데일에서 노동자 28명이 28파운드를 가지고 만든 세계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이며, 국제협동운동의 기본원칙으로 지금도 계승되고 있는 ‘로치데일 원칙’을 확립한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의 기록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다.

이 책의 제1부는 1857년에 간행되었고, 제2부를 더한 증보판은 1893년에 간행되었다. 제1부가 나온 뒤 150여 년 동안 이 책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헝가리, 일본 등 협동조합 선진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완역판이 나온 것인데, (재)아이쿰협동조합연구소의 ‘협동조합고전총서’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다.



니시무라 이치로 지, 번역연구모임 연리지 옮김 (2013)
알마 | 224쪽 | 규격 외 판형 | 13,500원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 - 미나미의료생협에서 배우는 협동과 돌봄

협동조합 시대, 미나미의료생협의 놀라운 이야기!

미나미의료생협에서 배우는 협동과 돌봄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 이 책은 협동조합의 시대에 좋은 사례로 미나미의료생협이 50년 동안 얻은 성과를 소개한다. 의료, 돌봄과 복지, 건강한 몸 만들기, 지역 만들기와 생협 만들기 같은 주제로 시골의 낡고 작은 진료소였던 곳에서 지역사회를 살리는 종합병원이 되기까지 미나미의료생협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 보고 한국의 의료생협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 본다.

미나미의료생협은 시골의 작은 진료소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조합원 6만여 명, 900개의 반 모임 80여 개 지부, 10개 이상의 불록을 형성하고 있으며 1일 방문 환자 수는 약 1,300여명 가량이다. 미나미의료생협의 시설, 의료진 등의 관계자들은 내원자나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복지뿐 아니라 문화까지도 서로 협력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미나미의료생협의 사례를 통해 한국 의료생협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며 협동조합의 시대에 한국의 협동조합론, 생협론이 성장하고 현실화 되는데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 줄 것이다.